

					
					
	<p>2014년</p> <p>환경노동위원회</p> <p>국정감사</p> <p>언론보도 기사모음</p>				
					
					
					
					
					
					
					
					
					

## 목 차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07-02	연합뉴스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2014-07-02	KBS	고용부 산하 일부기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2014-07-02	뉴스1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2	뉴스1	노동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2	머니투데이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2	뉴스1	우후죽순캠핑장, 환경부단속에도배짱영업
2014-07-02	머니투데이	힐링의 상징 '캠핑장'?...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2014-07-02	환경TV뉴스	연간 1천만 찾는 4대 해양국립공원, 안전요원 3명뿐
2014-07-02	한국경제TV	휴가시즌, 국립공원 안전관리 `적신훈`
2014-07-02	머니투데이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3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3	SBS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3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매년 급증
2014-07-03	머니투데이	"아동·청소년 노린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급증"
2014-07-03	아주경제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8	한국경제TV	이자스민 " LIG건설,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액 최대 "
2014-07-10	서울경제	지진관측 장비 40% 교체시기 지나
2014-07-10	머니투데이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돗물' 가장 비싼 지자체는?"
2014-07-13	노컷뉴스	수돗물 줄줄 새는데...노후 수도관, 111년 써야 바꾼다?
2014-07-13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2014-07-20	머니투데이	등잔밑 어두운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2014-07-31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감소
2014-08-17	연합뉴스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2014-08-17	YTN	"생수 제조업체 16%...수질 관리 부실"
2014-08-17	MBC	전국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허가취소·영업정지 11건
2014-08-19	연합뉴스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014-08-19	연합뉴스TV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014-08-19	헤럴드경제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014-08-19	문화일보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사망
2014-08-19	연합뉴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YTN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 9명 숨져"
2014-08-19	KBS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뉴스1	이자스민 "올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08-19	연합뉴스TV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머니투데이	부서간 '제각각'인 서울시의 싱크홀 현황 파악
2014-08-20	연합뉴스	수도권 주민 95% "싱크홀 겁난다"
2014-08-20	아주경제	군 병영시설 15%..."1급 발암물질 '라돈'에 떨고 있다"
2014-08-20	내일신문	라돈'에 병영시설 무방비 노출
2014-08-20	매일경제	전국, 싱크홀 19곳 국토부, 현장조사
2014-08-20	세계일보	피지도 못하고...아동 학대로 상반기 9명 숨져
2014-08-21	한국경제TV	차고나면 터지는 '싱크홀 공포'..."도심지하 50년 난개발이 화근"
2014-08-22	KBS	[이슈] 잇단 폭삭!...싱크홀 공포
2014-08-22	국제신문	"전국 상하수도관 30% 노후...싱크홀 우려"
2014-08-22	헤럴드경제	당정, 싱크홀 원인 집중점검 나선다
2014-08-23	동아일보	서울 교대역 인근서도 도로 함몰
2014-08-23	매일경제	시한폭탄 노후 수도권 교체율 0.9% 불과
2014-08-24	연합뉴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2014-08-24	SBS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2014-08-24	머니투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8억...서울시, 2000억으로 최다"
2014-08-24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만 7천억원 "
2014-08-25	내일신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원
2014-08-27	머니투데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2014-09-03	SBS	몇 대 안 되는 전기차 충전기, 그마저도 고장
2014-09-10	매일경제	미세먼지 기준치 50% 초과 수도권 지하철 '건강 빨간불'
2014-09-10	한국경제TV	미세먼지 '둥둥'... 숨쉬기 겁나는 지하철
2014-09-12	머니투데이	[단독]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업 9곳뿐
2014-09-12	한국경제TV	" 장애인 고용의무, 30대 기업 3곳중 1곳만 준수 "
2014-09-13	매일경제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금 내면 그만?
2014-09-16	내일신문	학교내 성희롱 문제 심각
2014-09-28	YTN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2014-09-28	연합뉴스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2014-09-28	MBN	아동·장애인·노인시설37%'석면노출사각지대'
2014-09-28	SBS	아동·장애인·노인시설 10곳 중 1곳 '석면 검출'
2014-09-28	경향신문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어린이집도 사용...지역별 석면 건물 분포 보니
2014-09-28	연합뉴스TV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2014-09-28	국민일보	아동·장애인·노인시설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10곳 중 4곳
2014-09-29	연합뉴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2014-09-29	KBS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 58억 원"
2014-09-29	경향신문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2014-09-29	뉴스스	경남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900만원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09-29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상반기 실업급여 58억원 부정수급"
2014-09-30	문화일보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 범죄라고 인지해야
2014-09-30	전북일보	아동, 노인시설 40% 석면 검출
2014-10-02	머니투데이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추진
2014-10-03	조선일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법안 발의"
2014-10-02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2014-10-03	YTN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 포장' 3년 간 577건"
2014-10-03	SBS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2014-10-03	연합뉴스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2014-10-04	세계일보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14-10-06	머니투데이	"도산 사업장 93%,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014-10-06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도산사업장 93%가 50인 미만"
2014-10-06	뉴시스	도산기업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014-10-06	충청투데이	4년간 폐업사업장 92%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014-10-07	연합뉴스	이자스민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기질 우려 수준"
2014-10-07	경향신문	"실내놀이터 공기 중 오염물질 심각"
2014-10-07	헤럴드경제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2014-10-07	헤럴드경제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 국내제품 1.2배 증가에 그쳐
2014-10-07	에코저널	이자스민, 한국생물다양성 '빨간불'
2014-10-08	KBS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014-10-08	연합뉴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014-10-08	이데일리	'임금체불자 지원' 체당금 부정수급, 2년새 17배 급증
2014-10-08	이데일리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2014-10-08	SBS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률 '낙제' 수준"
2014-10-08	KBS	이자스민 "지난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만2천여 건"
2014-10-08	SBS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 2천여 건"
2014-10-08	연합뉴스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천여건"
2014-10-08	노컷뉴스	부당해고 얼마나 많길래...구제신청해마다늘어
2014-10-08	내일신문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실효성 높여야
2014-10-08	세계일보	술 파는 키즈카페... 안전, 위생 '사각지대'
2014-10-08	헤럴드경제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2014-10-09	전북일보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내 최근 4년간 '월 32건'
2014-10-09	충청투데이	임금체불 근로자지원금 '줄줄' 2년새 부정수급 17배 늘어나
2014-10-10	YTN	기상청, 3년간 100억 성과급 평평
2014-10-10	연합뉴스	"기상청·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2014-10-11	세계일보	기상청 3년간 107억 성과급 잔치
2014-10-13	연합뉴스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10-13	KBS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2014-10-13	헤럴드경제	10곳 중 3곳 외국인 고용법 위반
2014-10-14	뉴시스	이자스민 "3년간 수질오염사고 369건 발생...3년간 2배 증가"
2014-10-14	아시아투데이	4대강 사업 준설선, 낙동강 56척 방치돼 '시한폭탄'
2014-10-14	환경일보	[국감]구제역 매몰지가 위험하다.
2014-10-14	강원일보	울건설현장임금체불4만1,250명피해
2014-10-14	세계일보	외국인고용사업장10곳중3곳외국인고용법위반
2014-10-14	강원일보	울건설현장임금체불4만1,250명피해
2014-10-14	문화일보	장애인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2년새 위반 과태료 부과 4.3배
2014-10-14	세계일보	외국인 고용업체 30% 고용법 위반
2014-10-16	뉴시스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 피해"
2014-10-16	이데일리	[국감]환경분쟁 86% 소음·진동 때문...2건중 1건 수도권에서
2014-10-16	에코저널	이자스민, 대형마트 25%만 '녹색매장' 운영
2014-10-17	전북일보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2014-10-17	전북일보	전북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2014-10-17	세계일보	황사때미세먼지실내가실외2배...외출자제권고무색
2014-10-17	MBC	'초미세먼지' 실내가 더 오염...환경기준 '무방비'
2014-10-17	세계일보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2014-10-17	전북일보	도내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 물질
2014-10-17	전북일보	도내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2014-10-20	한국경제TV	" 사회적기업 컨설팅 100억 투여, 효과 무색 "
2014-10-20	뉴시스	"장애인고용률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2014-10-21	일요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의존이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 원인"
2014-10-21	연합뉴스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천400억 써
2014-10-21	MBC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4년간 보험금 2천여억 원 지급
2014-10-21	JTBC	'시험 비리' 수사중 합격자 발표 강행...'공단 꼼수' 질타
2014-10-21	내일신문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산재보상 4년간 2400억원
2014-10-21	문화일보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재해 보험료 근로복지공, 4년간 지출 2300억 육박
2014-10-22	문화일보	쓰레기 봉투값 지역별 '체각각' 부산 기장 - 전남 곡성 4.7배
2014-10-22	내일신문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원 5곳중 4곳 안전에 문제
2014-10-23	연합뉴스	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대
2014-10-23	헤럴드경제	"빛 공해 싫어요"...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
2014-10-23	머니투데이	"쓰레기봉투 값 가장 비싼곳 '부산'...지역별 최대 4.7배 차이"
2014-10-23	경향신문	쓰레기봉투 지자체별 가격차 최고 6배, 가장 비싼 곳은?
2014-10-24	머니투데이	'의무가입' 아닌 외국인근로자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590억 납부
2014-10-27	문화일보	트럭까지 동원...'쓰레기 불법처리' 2년새 4배

##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3곳 고용의무율 안 지켜...7곳은 '면피' 수준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턱걸이 수준에서 겨우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 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용부 산하 일부기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말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57%, 노사발전재단 1.63%, 건설근로자공제회 0% 등 산하기관 11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13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상시 근로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률	의무 고용률
계	12,823	368	434 (527)	4.1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49	19	109 (154)	23.73	준정부 기관 3.0%
한국고용정보원	269	8	8 (10)	3.72	
근로복지공단	6,303	189	171 (193)	3.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94	44	47 (55)	3.68	
한국산업인력공단	1,100	33	31 (34)	3.09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0	10	8 (9)	2.5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801	45	45 (50)	2.7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62	11	10 (12)	2.60	기타 공공 기관 2.5%
(재)노사발전재단	245	6	4 (4)	1.6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5	1	1 (1)	1.54	
건설근로자공제회	85	2	0 (0)	0	0

\* ( )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적용 시 장애인 근로자수

【세종=뉴시스】 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턱결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3곳 고용의무를 위반...7곳은 '면피' 수준

구분	상시 근로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률	의무 고용률
계	12,823	368	434 (527)	4.1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49	19	109 (154)	23.73	준정부 기관 3.0%
한국고용정보원	289	8	8 (10)	3.72	
근로복지공단	6,303	189	171 (198)	3.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94	44	47 (55)	3.68	
한국산업인력공단	1,100	33	31 (34)	3.09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0	10	8 (9)	2.5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801	45	45 (50)	2.7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62	11	10 (12)	2.60	
(재)노사발전재단	245	6	4 (4)	1.6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5	1	1 (1)	1.54	
건설근로자공제회	85	2	0 (0)	0.00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턱걸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했다.

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이자스민 "고용부 산하 3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과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후죽순 캠핑장, 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전국 캠핑장 1500~2000여개 난립...대부분 미등록 업체



캠핑이 최근 대표적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상당수 캠핑업체들이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각지의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일부 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시설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해선 파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76개 캠핑장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고발 등 97개 사항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업체의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을 못했고,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시설 개선 없이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캠핑장은 특별한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들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총 1866곳으로 추정된다. 이 중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230곳(12.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성수기가 되면 무분별한 캠핑장 난립으로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캠핑장 관련 단속이 가능한 법령은 '하수도법'이 유일하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1일 오수발생량 2톤 초과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의원은 "깨끗한 환경 그 자체가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힐링의 상징 '캠핑장'?...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최근 대표적 여가문화로 '캠핑'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캠핑업체들이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하천·계곡 환경오염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지만 정작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선 파악조차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	점검 시설 수	위반 시설 수	위반 내역(건)				조치 내역(건)				비고
			수질기준 초과	무단방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기타관리위반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기술지원	
<b>계</b>	<b>434</b>	<b>76</b>	<b>22</b>	<b>3</b>	<b>17</b>	<b>34</b>	<b>27</b>	<b>50</b>	<b>20</b>	<b>3</b>	
서울	5	0	-	-	-	-	-	-	-	-	
부산	-	-	-	-	-	-	-	-	-	-	
인천	15	8	1	-	7	-	1	1	7	-	
대전	-	-	-	-	-	-	-	-	-	-	
광주	1	1	-	-	-	1	-	1	-	-	
대구	-	-	-	-	-	-	-	-	-	-	
울산	6	3	1	-	-	2	1	3	-	-	
제주	4	2	1	-	-	1	4	1	-	2	
세종	1	-	-	-	-	-	-	-	-	-	
경기	109	37	6	3	7	21	8	27	10	-	
강원	96	4	3	-	1	-	3	3	1	1	
충북	26	2	1	-	-	1	1	2	-	-	
충남	47	8	3	-	-	5	3	5	-	-	
전북	9	2	2	-	-	-	2	-	-	-	
전남	51	2	-	-	1	1	-	1	1	-	
경북	8	1	-	-	-	1	-	1	-	-	
경남	56	6	4	-	1	1	4	5	1	-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76개 캠핑장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고발 등 97개 사항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후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을 못한 상태고,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사후조치 없이 올해도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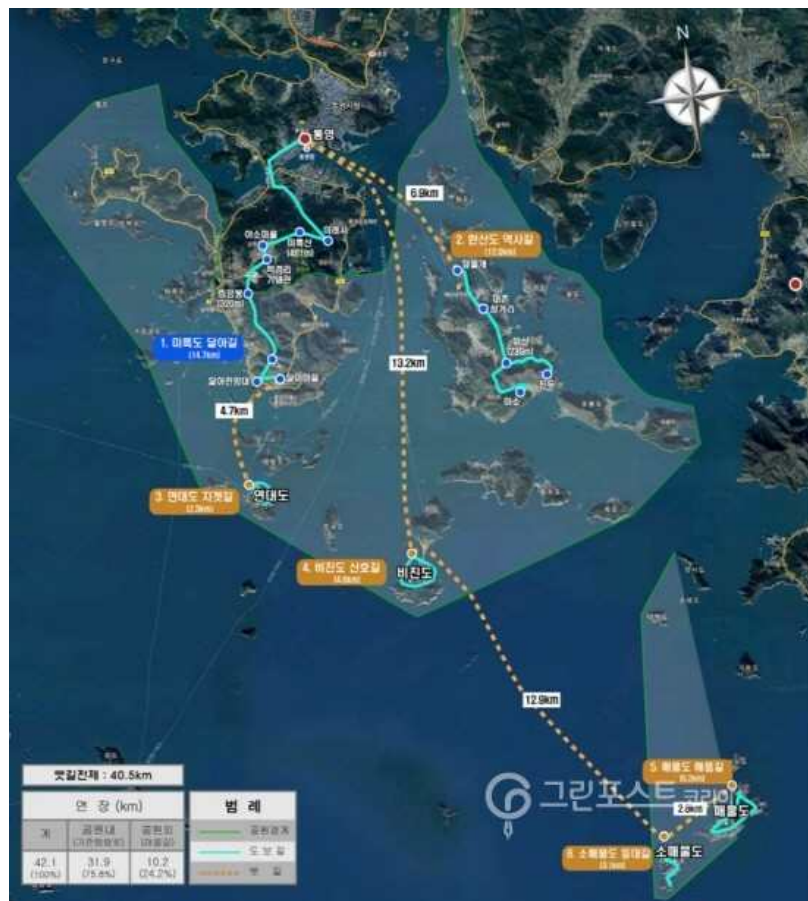
또 지난해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총 1866곳인데, 이 중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230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수기가 되면 캠핑장이 무분별하게 난립, 캠핑장에 대한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캠핑장 관련 단속이 가능한 법령은 '하수도법'이 유일하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1일 오수발생량 2톤 초과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한다. 하수의 무단배출은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의원은 "'깨끗한 환경' 그 자체가 우리 모두 지켜야할 소중한 재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연간 1천만 찾는 4대 해양국립공원, 안전요원 3명뿐

이자스민 의원, "긴급 상황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요원 필요해"



▲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다백리길'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연간 1000만여명이 찾는 해양국립공원에서 해상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은 달랑 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공개한 '국립공원 안전요원 현황 및 안전교육 실태' 자료에 따르면 4곳의 해양국립공원 내 6개 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재난 대응 요원은 6명이다.

해당 해양공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도해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이며, 이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만 각각 3명씩이 근무한다.

다도해해상사무소의 경우 안전관리반을 3명 운영 중이며, 변산반도사무소는 재난구조대 3명을 두고 있다.

다만 성수기인 7월에서 8월이면 각각의 사무실마다 한시적으로 안전요원을 10명씩 총원한다.

문제는 국민들이 성수기보다 5월이나 6월에 더 많이 방문한다는 점이다.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월별 방문 현황을 보면 국민들이 계절과 상관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해양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변질수 있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 요원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휴가시즌, 국립공원 안전관리 `적신호`

여름 휴가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국립공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객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 관리 당국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1년 2천198건에서 2012년 2천414건, 2013년 2천889건으로 불어나는 등 매년 10% 이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5월까지 총 949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특히 불법행위 세부 내역 가운데 매년 가장 많이 단속되는 항목이 `비등산로 출입`과 `야영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 4가지로, 이같은 행위가 방문객 안전과 산불 위험에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또다른 세월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새로운 등산로 개발과 새로운 야영·취사장 확보를 통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과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천898건, 2012년 8천874건, 2013년 9천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습니다.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천898건, 2012년 8천874건, 2013년 9천686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매년 급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 범죄에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카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청소년 노린 몰래 성범죄 2년새 3배 급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지난해 705건에 달했다. 2년새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몰래카메라에 강간, 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지난해 9686건에 육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발달로 인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몰래카메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 이자스민 " LIG건설,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액 최대 "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LIG건설의 고용부담금 체납액 규모가 3억7천6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위는 1억8천만원을 체납한 나사아웃소싱주식회사, 3위는 1억7천100만 원을 체납한 태아건설이 각각 차지했고 삼우이엠씨와 진방템프그룹, 신영건설공영, 운양건설, 중앙개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영건설공영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치 부담금을 현재까지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천만원을 넘었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지출한 기업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장애인 총 2천399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876명을 고용하지 않았고 총 70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LG디스플레이가 39억4천만원, LG전자 36억4천만원, SK하이닉스 31억5천만원, 대한항공 27억5천만원, 홈플러스 21억6천만원, 신한은행 21억4천만원, 우리은행 20억5천만원, 삼성디스플레이 19억7천만원, 국민은행 19억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8억원 등을 각각 부담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업이 앞장서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진관측 장비 40% 교체시기 지나

국내 지진관측 장비 10대 가운데 4대는 교체시기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지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비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 문제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10일 기상청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지진관측 장비 127대 가운데 54대가 교체시기(9년)를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 완도(1999년), 경남 진주(1999년)의 지진관측 장비는 교체시기가 6년이나 지난 노후 제품이어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강원도 인제와 속초, 전남 순천과 백운산, 여수, 영암 등 35개 지역의 지진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 14년 동안 교체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지진의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진관측 장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994년 국내 지진발생 횟수는 2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25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 4월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해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적잖은 시민들이 지진을 감지한 바 있다.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어서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어 원인분석과 사전예방을 위해 측정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문제로 노후장비 교체를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관측장비의 교체주기인 9년을 경과해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큰 우려는 없다"며 "교체주기를 기준으로 장비를 바꾸려고 하지만 정부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돗물' 가장 비싼 지자체는?"

이자스민 "전북, 수돗물 판매단가 1m<sup>3</sup>당 902.4원으로 전국서 가장 비싸"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의 수돗물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북의 수돗물 판매단가는 1m<sup>3</sup>당 902.4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의 1m<sup>3</sup>당 513.4원과 비교하면 1.75배나 비싼 것이다.

반면 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지자체는 강원도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m<sup>3</sup>당 1377.30원으로,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1m<sup>3</sup>당 563.7원)에 비해 2.4배나 높았다.

실제 강원 일부 지역의 경우, 대표적 석회암 지역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개발이 용이치 않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급수역량이 부족한 평창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시는 27.5%의 누수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3.1%의 누수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누수율을 기록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수돗물 판매단가(1m<sup>3</sup>당 875.2원)가 생산원가(1m<sup>3</sup>당 832.7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수돗물 생산 원가 및 단가 비교 표>

지자체	2012			2011			2010		
	총괄가 (원/m <sup>3</sup> )	평균 단가 (원/m <sup>3</sup> )	누수율 (%)	총괄가 (원/m <sup>3</sup> )	평균 단가 (원/m <sup>3</sup> )	누수율 (%)	총괄가 (원/m <sup>3</sup> )	평균 단가 (원/m <sup>3</sup> )	누수율 (%)
전국	814.7	649.1	10.4	813.4	619.3	10.4	777.2	610.2	10.8
서울특별시	630.7	564.6	3.1	621.4	520.1	3.8	587.7	514.2	4.2
부산광역시	849.3	689.5	4.0	833.6	636.4	5.0	833.6	635.3	5.1
대구광역시	581.2	580.1	5.3	583.5	537.2	7.0	585.0	539.6	9.0
인천광역시	677.1	642.0	7.8	696.3	645.0	9.5	653.3	636.6	8.5
광주광역시	615.3	525.0	11.2	626.7	524.1	11.9	622.1	498.4	13.2
대전광역시	563.7	513.4	6.8	541.5	484.6	6.4	530.4	476.9	9.3
울산광역시	832.7	875.2	8.1	920.5	763.6	8.3	920.5	760.5	9.3
세종특별	1,278.6	785.1	27.5						
경기도	717.8	624.9	6.5	734.5	618.5	6.9	694.5	618.5	7.4
강원도	1,377.3	750.0	22.3	1,385.9	734.2	23.0	1,291.5	716.1	21.7
충청북도	836.6	691.8	10.3	850.6	683.2	9.2	833.6	671.3	9.2
충청남도	1,094.5	731.1	15.9	1,049.6	726.2	15.1	1,052.4	722.1	15.2
전라북도	1,068.6	902.4	22.9	1,029.0	773.0	19.0	907.1	745.0	20.5
전라남도	1,161.2	829.6	23.0	1,164.1	786.5	21.6	1,075.2	760.5	22.3
경상북도	1,120.9	674.5	21.9	1,077.8	649.9	22.2	1,019.0	627.8	21.6
경상남도	1,006.3	781.8	23.2	1,004.9	750.1	20.5	995.1	732.3	20.8
제주도	883.1	667.0	14.8	985.0	626.1	14.8	985.0	598.3	14.9

## 수돗물 줄줄 새는데...노후 수도관, 111년 써야 바꾼다?

노후수도관 교체율 0.9% 불과...수돗물 4,500억원어치 누수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우리나라 전역에는 대략 18만km의 수도관이 지하에 깔려 있다. 이 수도관을 타고 수돗물이 가가호호에 공급된다.

그런데 이 중 4만km가 넘는 수도관이 설치한 지 21년이 넘은 노후배관이다. 지구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을 길이의 수도관이 이미 녹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배관이라는 뜻이다.

원칙상 21년이 넘은 노후배관은 교체를 해줘야 한다. 늦어도 30년이 넘기 전에는 바꿔야 한다. 방치하면 곳곳이 터져 누수가 생기고, 수질도 나빠져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수돗물은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환경부의 '2012년 상수도 통계'와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12년에 전국 지자체들은 60억2,917만 톤(1m<sup>3</sup>를 1톤으로 환산)의 수돗물을 생산했지만, 이 중 6억2,602톤이 누수됐다. 누수율이 10%가 넘는다.

## ◆ 줄줄 새는 수도물...1년에 4,500억원 어치 땅 속으로

누수된 수도물은 대구(2억8천 톤)와 인천시(3억5천 톤)에서 생산한 수도물의 총량과 맞먹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4,5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특히 강원도(22.3%)와 세종시(27.5%)는 누수율이 20%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누수의 주범은 노후배관이다. 배관 교체를 통해 상당량의 누수를 잡을 수 있지만, 정작 수도관 교체율은 0.9%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선진국의 관로 교체율은 2% 이상”이라며, “지금의 교체율(0.9%)로는 관로를 한 번 설치한 뒤에는 해당관로를 111년간 사용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노후배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의 악순환'에서 이 문제가 비롯된다.

## ◆ 낮은 수도요금에서 시작되는 '상수도의 악순환'

2012년 기준으로 수도물 1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전국 평균 814.7원이다. 그런데 평균 수도요금은 649.1원에 불과하다. 물 1톤을 생산할 때마다 165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 부채는 2012년 9,617억원에 달한다. 수도물을 공급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관로교체를 위한 비용까지 마련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 몰린다.

때문에 급한 곳만 땀질식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방치해두다보니 누수는 점점 심해지고, 누수되는 만큼 채산성 없는 수도물을 더 생산하고, 다시 빚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도 배관 교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분류돼 있어서 관련 국가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시군에는 국비 지원이라도 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2013년 재해건수 전년보다 69%↑ 올해도 4명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안전으로 '작업중지권'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수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현대중공업 직영·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만에 69% 늘었다.

직영은 현대중공업 소속 정규직 노동자를 뜻하고, 하청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근무는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하는 노동자다.

최근 3년간 현대중공업 직영 노동자의 산재 건수는 2012년 193건(사망자 5명 포함)에서 2013년 187명(사망자 7명 포함)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4월 말 현재까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1명과 재해자 62명이 발생했다.

반면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2012년 61건(사망자 4명 포함)에서 2013년 103건(사망자 1명 포함)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추락과 화재 사고로 4명이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수주량 증가로 필요한 인력의 대부분을 고용 비용이 저렴하고, 일감이 떨어지면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하청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계열 3개 선박건조업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수주량은 2012년 666만9천GT에서 작년 1천773만1천GT로 약 166%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 이미 618만1천GT를 수주했다.

GT는 뱃머리부터 배꼬리까지에 이르는 갑판 이하의 선내 총 용적을 환산한 단위로, 1GT는 2.83m<sup>3</sup>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주 산업안전실장은 "회사의 고용 유연화 전략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청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특히 해양사업부는 2천여명 정도였던 하청 노동자가 현재 1만5천~1만6천여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부의 직영 노동자는 하청의 10% 수준인 1천800여명으로 작업량이 늘어도 큰 변동이 없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사측 관계자도 "작년 수주량이 대폭 늘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와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상대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으로, 위험한 작업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에 산재에 더욱 취약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하창민 지회장은 "10일짜리 공사를 5일내 끝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잇따른 사고 이후 회사가 대대적인 안전조치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 지회장은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 일정을 못 맞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어이없는 사고가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무리한 공정을 현실화하고, 위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하청지회는 5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영 노동자들도 이 같은 고충에 공감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안전 미비 상태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작업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현장 조합원과 노조 간부, 명예 감독관 등 10명으로 구성돼 분기별로 한번씩 작업장 시찰을 하는 등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여기 산재 사고도 포함된다"면서 현대중공업이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잇따른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집단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탁했다"면서 "이달 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등잔밑 어두운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12개 중 4개 작년 청년채용 정부기준 하회...

"공단 등 정원문제, 즉시 기준충족 어려워" 난색



고용률 70% 달성 등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률이 '낙제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행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기준을 하회하는 곳도 네 곳이나 돼 고용부가 산하기관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상회한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 단 한 곳 뿐이었다. 이 외에는 대부분 0~5% 수준에 그쳤다. 한국잡월드도 청년채용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곳 중 한국잡월드를 포함한 네 곳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매년 정원의 3% 이상 선발)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이 1748명에 달하는 한국폴리텍대는 지난해 18명의 청년을 채용해 채용률이 1.0%에 불과했다. 404명 정원의 한국기술교육대도 청년채용이 4명에 그쳐 1.0%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정원 217명의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채용률이 0.9%에 불과했다.

의무할당제 기준을 겨우 넘긴 산하기관들의 청년채용률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원이 156명인 노사발전재단은 청년채용률이 3.2%로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또 358명이 정원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도 3.1%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644명 정원 중 19명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해 3.0%의 채용률로 기준에 턱걸이했다.

각각 정원이 1000명이 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채용률은 4.2%, 4.5%에 불과했다. 정원이 5369명으로 고용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근로복지공단은 288명의 청년을 새로 채용해 채용률이 5.4%로 그나마 높은 축에 속했다. 정원 55명의 미니 공공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명의 청년을 채용해 16.4%의 청년채용률을 기록했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10%를 넘겼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률도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상황이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83개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전체 고용인원 중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청년인력을 채용한 기관은 156개(55.1%)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43.1%로 더 적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계도할 것"이라며 "다만 공단의 경우 대부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을 내보내지 않는 한 단시간에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법에 강제성을 두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법은 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수준이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적용의 강제성을 놓고 법 개정 당시에도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감소

폭행, 금품갈취, 모욕·명예훼손 많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학교 폭력발생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465건이다.

2012년 913건, 2011년 1천117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 121건에 불과하다.

전남지역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613건에서 2012년 1천321건으로 늘었지만 2013년 699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67건에 그쳤다.

전국 발생건수도 2011년 2만1천957건, 2012년 2만3천877건, 2013년 1만7천385건, 2014년 4천933건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광주의 경우 폭행이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 모욕·명예훼손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해 3명이 구속됐고 339명이 불구속됐으며 40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전남지역도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갈취, 모욕·명예훼손 순으로 23명이 구속됐고 312명이 불구속, 94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학교급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초등학생 순이다.

이자스민 의원측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자스민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성과는 있지만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현장에서 폭력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밝혔다.

##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법령위반 제재 2012년 14건, 2013년 19건으로 증가세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전국의 생수 제조업체 중 약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발암우려 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 등과 같은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생수 제조업체 9곳이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 7월말 현재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가 전국적으로 58곳(휴업 중인 7곳 제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6%가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최근 들어 먹는 물 관리법을 어겨 제재를 받는 사례는 늘고 있다. 2012년 14건이던 제재건수는 2013년 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1건이라 현 추세라면 작년 수준을 웃돌 수도 있다.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한 업체는 2011년부터 수질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마다 제재를 받다가 결국 올해 초 허가가 취소됐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생수를 유통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적발 업체 상당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생수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생수 업체를 정기 검사하고 시판 생수를 거둬들여 수질상태를 살펴보는 수거검사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가 주관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역시 대부분 적합 판정이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자가 품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생수업체들은 자가 품질검사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다. 2012~2013년에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기검사와 수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가 전수조사 등을 벌여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수질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생수 제조업체 16%...수질 관리 부실"

전국 생수 제조업체 가운데 약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위해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허가를 받은 전국 생수업체 58곳 가운데 9곳, 16%가 올해 상반기에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해 11건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발암우려 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 등과 같은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과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적발 업체 상당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생수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독권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허가취소·영업정지 11건



▲ MBC TV 방송 캡처

전국의 생수 제조업체 가운데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생수 제조업체 58곳 가운데 9곳이 먹는 물 관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 현장에서 기자 및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부분 하수누수가 원인... 맨홀 뚜껑도 40회나 솟구쳐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최근 석촌지하차도 등 서울 시내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잇따라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7개월 사이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 뚜껑 솟구침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수관로 꺼짐 2곳, 기타 10곳 등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릉·군산 7곳, 정선 5곳 등의 순이었다.

싱크홀의 크기는 0.01~225m<sup>3</sup>(평균 2.63m<sup>3</sup>), 높이는 0.05~4m(평균 1m)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하수 맨홀 뚜껑의 솟구침 사고도 40회나 발생, 3명이 다치고 11대의 차량이 부서졌다.

맨홀 뚜껑이 솟구친 것은 대부분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인 역류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발생 횟수는 제주 6회, 광주·대전 5회, 서울·창원 4회 등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싱크홀 안전점검을 벌이는 만큼 원인을 철저히 찾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서울 시내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7개월 사이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2012년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대부분 하수누수가 원인

경기도 안성 11곳으로 최다

최근 서울 잠실 석촌동 지하차도 주변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 7개월 사이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 뚜껑 솟구침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수관로 꺼짐 2곳, 기타 10곳 등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릉·군산 7곳, 정선 5곳 등의 순이었다.

싱크홀의 크기는 0.01~225㎡(평균 2.63㎡), 높이는 0.05~4m(평균 1m)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하수 맨홀 뚜껑의 솟구침 사고도 40회나 발생, 3명이 다치고 11대의 차량이 부서졌다.

맨홀 뚜껑이 솟구친 것은 대부분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인 역류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발생 횟수는 제주 6회, 광주·대전 5회, 서울·창원 4회 등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싱크홀 안전점검을 벌이는 만큼 원인을 철저히 찾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문화일보

2014년 08월 19일 화요일 009면 사회

##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사망

**이자스민 의원 자료  
신체·정서·성학대 받아  
올 8928건 신고... 증가세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명의 아이들이 부모 등 어른들의 방임과 신체 및 정서 학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급히 아동학대 방지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실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이 중 4명은 1세 미만의 영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아동 중 5명은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등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받았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무려 2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 중 8명이 영아였다. 2012년에는 10명(영아 3명), 2011년에는 13명(영아 4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076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8928건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그 외 전북 755건, 경남·경북이 각 583건, 인천이 5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796명의 가해자 중 피해 아동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은 9.7%(660명),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한 경우는 5.5%(372명)에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시키는 '지속적인 관찰 처분'을 내린 경우가 76.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22명 중에서도 고소·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는 45.5%(1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9명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

##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아동 학대 반대요' 촛불시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숨졌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천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928건이 신고됐다.

이 중 경기도가 2천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천122건, 전북 755건, 경상남·북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 9명 숨져"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아동학대로 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한 살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 만 146건, 2012년 만 943건, 지난해 만 3천 76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 928건이 신고됐습니다.

##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지난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1년 만 146건, 2012년 만 943건, 지난해 만 3천 76건, 그리고 올 상반기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 928건이 신고됐습니다.

## 이자스민 "올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서울=뉴스시스】 우은식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9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숨졌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0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928건이 신고됐다.

이 중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 전북 755건, 경남·북이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올해 상반기에만 아동 9명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 부서간 '제각각'인 서울시의 싱크홀 현황 파악

### 송파구 싱크홀·동공 발생 현황



서울시가 최근 송파구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싱크홀 및 동공과 관련, 현황 파악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시 부서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각 부서간 각자의 기준으로 싱크홀을 판단하면서 현황집계 수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등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싱크홀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안전실 소속 도로관리과와 물재생계획과다. 하수관 누수로 인해 도로가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부서가 이번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집계를 하고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문제는 이들 각 부서에서 집계한 수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날 각 부서에서 밝힌 싱크홀 현황에 따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된 위치는 석촌지하차도 한 곳이며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은 각각 1곳과 7곳 등 모두 8곳이다.

이에 반해 물재생계획과에서는 6월30일 오금로 13길 3번지( 방이동 28-3)에서 발견된 싱크홀을 포함해 싱크홀 5곳과 동공 7곳 등 총 12곳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물재생계획과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이 자료는 이 의원실에서 '노후 수도관 누수문제'에 대한 파악과 함께 관련 싱크홀 현황도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것.

이 자료를 제공받아 현황을 조사했던 환경부는 서울시 부서간 자료의 상이함에 대해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재생계획과에서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시 대책발표를 들었는데 다른 점이 너무 많았다"며 "심지어 상세한 위치와 발생일자가 차이가 나서 직접 위치를 확인해봤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싱크홀 발견 시 모든 현황은 도로관리과에 보고된다"면서도 "석촌 지하철도에서 발생된 싱크홀 이외의 것들은 경미한 도로파손에 가까워 싱크홀로 보기 어려워 집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싱크홀이란 단어도 시 내부에서 '도로함몰'이라는 말로 대체해 쓰기로 했다"며 "도로에서 벌어진 다양한 상황이 싱크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 현황 파악이 부서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각자의 기준에서만 현상을 바라보고 파악하기 때문"이라며 "이 현상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명확히 지정해주거나 신설해야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대처도 빠르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서간 싱크홀 집계에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선 대안을 찾겠다"면서 "도로가 함몰된 부분에 대해 크기별로 세분화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주민 95% "싱크홀 겁난다"



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에 12시 20분께 생긴 싱크홀로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79%는 "나도 피해자 될 수 있다" 불안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도권 주민 95% 이상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4일 수도권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싱크홀 발생에 대한 인식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pm 3.1\%P$ )를 했다.

조사결과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말에 '매우 불안' 53.5%, '불안' 41.7%로 답해 95.2%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55.1%, '매우 그렇다' 24.5%로 답해 79.6%가 잠재적인 싱크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홀 발생시 가장 위험한 장소로는 '번화가'와 '출·퇴근시'를 꼽았다.

싱크홀 증가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증가' 34.3%, '증가' 63.2%로 답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는 홍수·태풍 다음으로 싱크홀을 꼽았고, 폭염·가뭄, 황사, 산사태가 뒤를 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기초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창문이나 방문이 작동되지 않는 등 싱크홀 징후가 나타나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과천·부천·안산·의정부·평택에서 각 1곳, 안성에서 11곳 등 총 16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 군 병영시설 15%...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떨어지고 있다"



군별 병영시설들 중 148 Bq/m<sup>3</sup> 초과율 [그래프=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당초 알려진 498개 군 부대보다 라돈농도 기준치 초과 더 많다  
국방부, 라돈저감 추진...환경부에서 미 조사한 2000여 동 실태 파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윤일병 사건 후 군 인권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라돈' 농도도 관리 기준치를 넘는 등 병영시설 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윤일병 사건 후 군 인권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라돈' 농도도 관리 기준치를 넘는 등 병영시설 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 부터 건네받은 '2013년 전국 병영시설 라돈 실태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498곳이 환경부의 라돈 농도 관리 기준(148벵크렐)을 초과했다.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전체 3357곳 중 15%가 148베크렐(Bq/m<sup>3</sup>)를 초과했으며 50Bq 이상 초과하는 곳이 273곳(8%), 200Bq 이상 초과하는 곳도 67곳(2%)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977Bq은 기준농도의 13배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다수에 선진국들은 주택 내 라돈농도 관리기준(미국은 주택보수 필요 조치기준 1m<sup>3</sup>당 148Bq)을 마련했으나 국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곤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군부대의 라돈 농도 수치는 환경부 기준 148Bq를 초과하는 등 군내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낙후된 병영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도 엉망인 셈이다.

라돈은 일정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으로 결국 목숨을 앗아 가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폐로 유입돼 방사선을 방출하는 등 폐암을 일으킨다.

이자스민 의원은 “결과 보고서 내용 중 환경보건학적으로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오랜 시간의 노출은 고농도의 오염물질의 짧은 시간 노출에 비해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며 “병영시설의 건강한 환경관리는 군장병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부·국방부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라돈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계자는 “토양라돈 배출장치·외부공기 유입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내장) 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 등 적용 가능한 라돈저감방법이 추천된다”며 “병영시설에 이 방법을 표준지침서로 활용하는 등 병영시설의 라돈저감을 위한 공법의 메뉴얼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지만 군부대 대책은 환경부 소관이 아닌 관계로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라돈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환경부에서 미조사한 2000여 동에 대해서는 국방부 주관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금년 7월부터 추가로 실시했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라돈 저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2014년 08월 20일 수요일  
019면 정책

## ‘라돈’에 병영시설 무방비 노출

### 24%가 기준 초과 법 관리 사각지대

병영시설 24%가 라돈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폐암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영시설 라돈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영시설 3357곳 중 838곳인 24%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중 라돈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화관 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가 148베크렐(Bq/m<sup>3</sup>)을 초과하면 안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권고 기준을 근

소하게 초과하는 곳이 498곳(15%), 기준을 50베크렐(Bq/m<sup>3</sup>) 이상 초과하는 곳이 273곳(8%), 200베크렐(Bq/m<sup>3</sup>) 이상 초과하는 곳이 67곳(2%)이었다. 게다가 권고 기준의 13배에 달하는 1977베크렐(Bq/m<sup>3</sup>)을 기록한 병영시설도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보건학적으로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고농도의 오염물질의 짧은 시간 노출될 때보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며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력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병영시설의 경우 아직 법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라돈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 이르면 올 하반기에 라돈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 매일경제

2014년 08월 20일 수  
A30면 사회

### 전국 싱크홀 19곳

### 국토부, 현장조사

2년간 53곳 발견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새서 잇따라 동공이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이 일대를 포함해 전국 19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가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한 송파구와 강동구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현장 6개소에 대해 우선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설계, 시공과정에서의 지반조사와 계측관리를 비롯해 안전관리, 예방대책 등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이 발생한 곳에서 토사 유출량을 조사한 뒤 공사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11월 초까지 싱크홀 전반에 대한 예방 대책과 개선안을 내놓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장원주·김정환 기자

세계일보

2014년 08월 20일 수요일 013면 사회

## 피지도 못하고... 아동 학대로 상반기 9명 숨져

올 8928건 신고... 경기 2051건 최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아동 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이

자스민 의원이 1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이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만 벌

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목숨을 잃었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

30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928건이 신고됐다.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 전북 755건, 경남·경북이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 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2014년 08월 21일 목요일 A08면 종합

# 자고나면 터지는 '싱크홀 공포' ... "도심地下 50년 난개발이 화근"

## NEWS 뉴스 추적

이달 들어서만 서울 송파구에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1개와 동공(지하빈 동굴) 7개가 발견되면서 도심 지하공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00년대 중후반 농촌지역에서 가끔 발생하던 싱크홀이 서울 울산 등 대도시 중심 지역에서 연이어 생겨나고 있어서다. 대도시 지하공간엔 지하철 지하차도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이 거미줄처럼 지나가고 있다. 국외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올 7월까지 2년7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537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싱크홀 등의 원인을 차차하고 지하공간 시설물 등의 현황 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2000년대 들어 지하공간 현황파악을 시작했다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군 지역은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간 송파구서 동공만 7개  
 국내 '도심 싱크홀'에 대한 우려는 지난 6~7월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서 4건의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일 방이동싱크홀에서 1km 남짓 거리에 있는 송파구 석촌동 석촌지하차도 일구부분에서 폭 2.5m, 깊이 5m 가량의 지반침하가 일어났고 서울시가 이 싱크홀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공 7개를 발견



### 송파서 洞空 이달 7개 - "9호선 공사 탓" 추정 상하수도·지하상가 노후화, 개보수는 미흡 "취약지 지질조사 20~30m 간격 촘촘히 해야"

하면서 심각성이 부각됐다. 지난 19일엔 울산 중구 우정동 도로에서 폭 1.5m 싱크홀이 생겨났으며 20일엔 충북 단양에서 직경 3m, 깊이 10m 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송파구 싱크홀과 함께 발견된 동공 중 일부는 폭이 5~8m, 깊이가 80m에 달할 정도로 대형인데다 지하차도와 지하철 공사 구간 사이에 위치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동공 20cm 거리에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 기둥에서도 20여군데 균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지하철 공사 탓으로 추정"

송파구에서 연이어 나타난 싱크홀과 동공 원인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그룹에 의뢰해 현장조사 등을 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위해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약한 지반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의 답변만 내놨다. 원인 규명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서울시 및 시공사가 원래 지반이 약한 것을 알면서 묵인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의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지하공간  
 잇따르는 싱크홀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하공간 개발을 감안할 때 도심 개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 지하에는 29개 공공지하 보도시설과 20개 노선(682km)의 지하철, 1만3000km의 하수관망 등이 들어가고 있다. 상수도관과 전력망, 지하도로와 지하상가도 있다. 대부분 196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부설·개발돼 50~60년이 지난 곳도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나 도면은 시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각 시설물이 노후화됐는데도 관리 주체별로 제때 보수·교체하지 못한 것, 일부 지역에선 부실시공했거나 비효율적으로 난개발한 것이 문제"라고 털어놨다. 롯데한국건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그룹장도 "도심 지반침하는 매설 시설물이 낡을수록, 공사 과정에서 예방과 관리가 소홀할수록 일어난다"며 "최근 싱크홀은 굴착 채굴 등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싱크홀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다. 도심 싱크홀의 경우 복구 공사가 우선이어서 원인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합 지질 연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질이 취약한 지역은 100m마다 군데군데 지질조사를 하도록 하는 데 따라 20~30m마다 더 촘촘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이원전기자

selemoon@hankyung.com

## [이슈] 잇단 폭삭!...싱크홀 공포



### ▲ KBS 취재파일K 방송 캡처

#### <앵커 멘트>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선 길을 걸을 때 땅만 보고 걷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폭삭 꺼지는 싱크홀 현상 때문인데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국에 싱크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파일K 이번주 이슈는 싱크홀 현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서영민 기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녹취>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이런 누수 문제가 생기는데 누수 문제가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오래된 수도관을 빨리 교체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 "전국 상하수도관 30% 노후...싱크홀 우려"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현장 안전점검, 최근 싱크홀과 공동 등이 잇달아 발견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인근 지하철 9호선 920공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터널 굴착 장비인 실드 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상하수도관의 약 30%가 설치 후 20년이 넘어 싱크홀(지반이 밀어서 꺼지면서 생긴 큰 구멍)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 하수관 총 연장 12만 3천311km 중 설치 후 20년이상 지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하수관은 총 4만 1천820km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상수도 총 연장 17만 9천159km 중 26%에 해당하는 4만 7천714km가 설치 후 20년이 넘었고, 이 중 2만 8천82km는 24년도 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관을 모두 따지면 전체 30만 2천470km 중 29.6%인 8만 9천534 km가 낡은것이다.

이처럼 낡은 상하수도관은 도심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70곳에서 싱크홀이 생겨 5명이 다치고 6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흘러나온 수돗물과 하수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돗물 누수 때문에 발생한 싱크홀은 17곳이며, 하수 누수로 53곳에서 싱크홀이 생겼다.

실제 지난 7월 안양시에서 발생한 가로·세로 2m, 깊이 1.2m의 싱크홀 원인이 된 노후 하수관의 경우 1974년도에 설치된 관이었으며, 같은 달 생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싱크홀도 낡은 하수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당정, 싱크홀 원인 집중점검 나선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이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에 대한 원인 점검에 나선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반이 아래로 꺼지며 구멍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부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국토교통부·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주 정책위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주재한 데 대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기 위해 마련했다”며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빠른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싱크홀 현상과 아울러 경기·전주·익산·대구 등 최근 곳곳에서 작은 포트홀(Pot hole) 등이 발견되는데 대한 원인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뚜껑 솟구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현황은 사상자 4명과 차량 파손 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 안전점검’에서 이 문제를 정밀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東亞日報

2014년 08월 23일 토요일 A10면 종합

## 서울 교대역 인근서도 도로 함몰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일대에서 싱크홀과 동공(洞空·텅 빈 굴)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22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달리던 승합차의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교대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는 서울 서초대로 1차로에서 도로가 함몰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함몰 지점은 교대역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함몰로 발생한 구멍은 가로 1.5m, 세로 1.8m, 깊이 1.2m 크기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지점을 지나던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가 구멍에 빠져 한동안 교통이 정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함몰 부분을 조사한 결과 최근 실시된 상수도 공사 도중 장비가 기존 하수도관을 건드려 하수가 새 나오면서 지반이 약해져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m 넘는 구멍에 승합차 바퀴 빠져 서울시 “수도관 누수로 지반 약화”

### 상하수도관 노후로 인한 싱크홀 2년간 70건 발생해 5명 다쳐

시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근처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최재덕 씨(66)는 “도로에 폭 꺼진 구멍을 보니 아찔하다. 내가 서 있는 인도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선 씨(28·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도로 한복판이 꺼진 걸 보니 앞으로 무서워서 버스도 못 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싱크홀 현상이 전국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상하수

도 관련 싱크홀이 총 70건(상수도 17건, 하수도 53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차량 6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싱크홀은 대부분 상하수도관이 노후 화해 누수가 일어나고 지반이 유실되면서 발생했다. 대부분 가로, 세로, 깊이 1m 이하로 작았지만 일부 싱크홀은 깊이만 4m 가까이 되는 등 규모가 큰 것도 있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2년 말 기준 총연장 30만2470km인 전국 상하수도관 가운데 29.6% (8만9534km)는 내구연한인 20년이 지난 것이어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전체 하수관의 70~80%, 상수관의 30% 이상이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누수 및 지반 침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일단 30년 이상 된 상하수도관부터 시급히 보수,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유성열 기자

매일경제

2014년 08월 23일 토요일 A08면 종합

# 시한폭탄 노후 수도관 교체율 0.9% 불과

<싱크홀 주원인>

## 석촌지하차도 무더기 동공 “시공사 과실 때문” 잠정결론

최근 서울 송파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거대 동공이 발견되며 싱크홀(도로 침하)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포감은 서울시민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국 곳곳에서 53곳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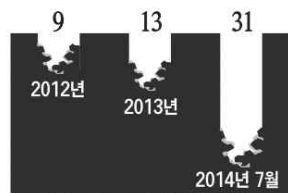
경기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곳), 강릉·군산(7곳), 정선(5곳) 등에서도 지반 침하 공포감이 컸다. 문제는 싱크홀 발생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이후 정부가 파악한 싱크홀만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한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23%가 최근 두 달 새 집중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 ◆전국 상수관 18%가 30년 묵은 노후관

싱크홀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은 노후 수도관 누수다. 지하에서 물이 새자 지반이 쪼그러 내려가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전국 53곳 싱크홀 가운데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전체 발생 원인의 77%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싱크홀과 동공 발생이 잦은 서울 지역 하수도관 전체의 48.4%가 30년 이상 묵은 노후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설한 지 3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은 총 5023.3km에 달한다. 서울-부산 간 직선 거리(350km)를 7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다. 통상 수도관 내구연한은 20~30년이다. 내구연한을 훌쩍 넘는 하수관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면서 하수 누

최근 3년간 전국 싱크홀 발생건수 (단위=건)



\*자료=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 환경부

수에 따른 지반 침식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 노후관이 문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교체 예산이 막대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노후 수도관 교체율은 0.9%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관 17만4157km 가운데 18.1%인 3만1503km가 30년 이상 묵은 노후관으로 급격하게 부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곳곳이 취약 지반…싱크홀 강남권 확대

취약 지반에 대한 조사 없이 마무리잡이식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일경제가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송파구, 여의도 일대는 층적층(모래, 자갈로 구성된 취약층) 지질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지역에는 대형 싱크홀과 동공이 집중됐다.

송파구는 석촌호수에서 수서역-북정역 인근까지, 여의도는 전역이 취약층으로 분류됐다. 도곡역 인근에서 양재천 일대 등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강남권 상당 부분도 층적층 지질로 구성됐다.

실제 최근 송파구 일대에 집중됐던 싱크홀이 다른 강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 3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승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멍의 크기는 가로 1.5m, 세로 3m이고, 깊이는 최소 1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합차는 앞바퀴가 구멍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설 관련 전문가는 “수십 년간 도심이 발전하는 시기에 전력망, 상수도관 등 난립 공사를 했던 게 현재 도로 침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촌지하차도 아래 지하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동공은 터널을 뚫은 시공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박정근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교수는 22일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공사 품질 관리에 실패한 것이 동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물산 등 시공사가 실드(Shield) 공법을 채택했으나 시공 능력이 부족했다”며 “공사를 하면서 애초에 계획한 양보다 많은 흙을 지상으로 배출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원주·김정환 기자**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이자스민 의원 의사진행발언(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7천38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연 2회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자치단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961억원에 달했다.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천억원이었다. 이어 경기 1천297억원, 부산 526억원, 인천 497억원, 대구 424억원, 경남 371억원이었다.

이처럼 체납액이 쌓여 있지만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변호판영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없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체납자를 상대로 납부 독려를 하려고 해도 기초지자체의 담당 인력마저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건수는 3만318건, 금액으로는 7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13건), 부산(9건), 인천·광주(6건), 강원(5건), 대구(3건) 순이었다.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천 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합니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 961억원에 이르렀으며,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만 318건, 금액으로는 7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아 2천억 원에 이르렀고, 경기 297억 원, 부산 526억 원, 인천 497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자치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8억...서울시, 2000억으로 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못 받은 부담금은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은 7388억1800만원이었다.

이 중 서울시의 부담금 1999억 5963만원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경기도가 1296억541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각 지자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961억원에 달했다. 이어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변호관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자스민 의원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만 7천억원 "

환경오염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7천억원 이상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까지 체납액이 7천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로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하고 징수실적의 1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961억원에 이르렀고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변호관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자치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원

### 서울시 약 2천억원 '1위'

매연, 온실가스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공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번씩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지자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961억원에 달했다.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999억5963만7140원으로 1위였다. 경기도 역시 1296억5415만5470원으로 체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

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지자체에 없어 문제”라며 “게다가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부담금 대상 업체 폐업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지자체가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캠프에 참여 중이던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실시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은 빠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을 끝낸 이후라도 그 결과를 모르게 되면 이용자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한성·유승민·김희선·이완영·황인자·박인숙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몇 대 안 되는 전기차 충전기, 그마저도 고장



### ▲ SBS 방송 캡처

#### <앵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전기 5대 중 1대꼴로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이 났고 이마저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36대입니다.

전기차를 타고 도심에 있는 충전소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급속충전기 1대의 안내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고장 났다는 안내나 연락처도 없습니다.

[전기충전소 설치 기관 관계자 : ((충전기) 작동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여쭙보려고요.) 우리 전기충전기 안 되죠 지금?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3년 전 보급한 전기차 충전소 정보시스템 앱을 검색해 고장 난 것으로 표시된 충전소를 가봤습니다.

앱에서 알려준 정보와 달리 충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EV 급속 충전기입니다.]

[김경배/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정책실장 : (앱에)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오겠죠. 충전이 필요해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정보 앱의 내용이 틀렸던 겁니다.

실제로 자치단체나 민간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충전기는 1천800대에 달하는데, 환경부는 고장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환경부가 직접 보급한 충전기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5대 중에 1대꼴로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자스민/새누리당 국회의원 :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현재 정부와 민간의 이원화 돼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이후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230억 원에 달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왔지만 주무 부처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

2014년 09월 10일 수  
A20면 사회

### 미세먼지 기준치 50% 초과 수도권 지하철 '건강 빨간불'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출퇴근 시간대에 미세먼지(PM-10) 등 발생량이 정부 권고기준치를 수시로 웃돌았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권고기준치 초과율은 겨울철 평상시에 44%를 기록했고, 인천 지하철은 겨울철 혼잡 시에 50% 초과율을 보였다.

한국경제

2014년 09월 10일 수요일 A25면 사회

# 미세먼지 '둥둥' ... 숨쉬기 겁나는 지하철

서울 기준치 초과비중 44% ... 인천은 63%  
환경부, 실태조사 ... 겨울철이 오염도 높아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발생량이 정부의 권고 기준치를 수시로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치 초과율은 겨울철 정상 시에 44%(18번 측정 중 8번)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 지하철의 겨울철 정상시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율은 63%, 혼잡시(주중 오전 7시30분~9시30분, 오후 6~8시)에도 50%로 높았다.

미세먼지는 매우 작은 입자로 돼 있어 사람 목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 먼지가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가 정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상시 미세먼지 권고 기준치는 200 $\mu\text{g}$ (마이크로그램)/ $\text{m}^3$  이하, 혼잡시는 250 $\mu\text{g}/\text{m}^3$  이하다.

겨울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것과 관련, 보고서는 지하철 외부 측 도시 전체의 미세먼지 오염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신 거



울철 승객의 옷차림이 두꺼운 탓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 등으로 실

내 공기 순환과 정화가 이뤄지지 때문에 겨울철보다 기준치 초과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서울 지하철에서 겨울철 혼잡시 42%, 정상시 33%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름철에도 혼잡시 22%, 정상시 33%의 초과율을 기록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500 $\mu\text{g}/\text{m}^3$  이하)를 적용했다.

보고서는 지하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장치의 청결을 유지하고 혼잡시간대 환기시스템 가동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가 양호한 운행구간에서는 외부 공기를 적극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 운행하는 차량은 실내 온도를 높이고 충분히 환기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기자 ohj@hankyung.com](mailto:ohj@hankyung.com)

## [단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업 9곳뿐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그룹은 9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은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약 14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그룹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지난해 기준 2.5%)을 준수한 그룹은 9개 기업이었다. 나머지 21개 그룹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위:%)	2010~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민간사업주·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0	2.50	2.70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0	2.50	3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국가·지자체 제외)을 지급하고 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 집단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민간기업 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만원)**

기업집단명	*장애인고용률	2013년	2014년
삼성	1.86	135억6000	142억9700
SK	0.88	52억5500	62억4600
LG	1.55	131억6300	136억8900
포스코	1.97	20억5100	25억원
GS	0.95	40억7100	46억6300
농협	1.56	15억8000	22억2900
한진	1.07	29억5800	38억5800
한화	1.57	29억5900	29억8700
KT	1.99	25억300	30억1500
두산	2.13	9억3900	11억8700
신세계	1.50	26억8900	18억2500
CJ	1.95	29억4200	32억7300
한국석유공사	2.06	5300	8700
LS	1.53	8억9700	11억8300
금호아시아나	1.59	14억8200	18억600
동부	1.17	21억300	24억9100
대림	0.88	11억800	14억9300
부영	0.59	1억8400	2억400
현대	0.88	9억5900	10억8300
OCI	1.38	7억1200	7억1200

※\*는 2013년 말 기준

민간 그룹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개였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55%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LG는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LS 11억8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100만원 △대림 14억9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300만원 △OCI 7억1200만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장애인 고용의무, 30대 기업 3곳중 1곳만 준수 "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이 9개 기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해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9개 기업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차, 롯데 등 4개사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의무고용률 1.86%를 기록해 올해 142억9천7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LG역시 136억8천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밖에도 SK 62억4천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천300만원, 한진 38억5천800만원, 한화 29억8천700만원, KT 30억 1천500만원, 두산 11억8천700만원, 신세계 18억2천500만원, CJ 32억 7천300만원, LS 11억 8천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천100만원, 대림 14억9천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천300만원, OCI 7억 1천200만원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4년 09월 13일 토요일  
A18면 사회

#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금 내면 그만?

## 30대기업중 준수기업 9개 불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과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 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2.5%)을 준수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에는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반면 삼성(1.68%), LG(1.55%), SK(0.88%)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

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LG와 SK도 각각 136억8900만원과 62억46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삼성·LG·SK 이외에도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등 재계 순위 30대 기업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재용 기자

**내일신문**

2014년 09월 16일 화요일  
019면 정책

## “학교내 성희롱 문제 심각”

### 인권위 진정사건중 기업 제외하면 1위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진정사건 내역’ 분석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2012년 228건에서 지난해 241건, 올해 8월까지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회사 등 기업을 제외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가 제일 높다는 점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2012년 21건, 2013년 26건, 2014년 8월까지 2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개인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다. 개인회사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37건, 2014년 8월까지 27건 등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률은 매년 100%에 가깝다. 2011년 99.1%, 2012년 99.7%, 2013년 99.9% 등이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평가시 반영 △미이행 사실 등에 관해 언론기관에 공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교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해 다른 강사들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성희롱 문제로 진정한 남성은 2012년 9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8월까지 15건으로 나타났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 YTN 방송 캡처

[앵커]

과거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던 석면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지 이미 오래됐죠.

그런데도 아직 석면을 사용하는 건물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은 10곳 가운데 4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절연성과 내열성이 좋아 건축자재로 이용돼 온 석면.

하지만 미세한 섬유질인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970년대 이후 밝혀지기 시작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보호돼야 할 아동이나 노인 생활시설에서 이 석면의 사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복지시설 2천603곳 가운데 37%인 961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복지와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시설, 노인 복지 시설 순이었습니다.

개인 주택이나 오피스 건물에 석면 사용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가 석면의 최대 피해자로 남은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천4백여 명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노유자 시설 2천603곳 중 961곳 석면건물...경기, 부산, 서울 순 많아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잇따라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천547곳 중 2천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m<sup>2</sup>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천426명이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 【 앵커멘트 】

아동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해야 할 곳이 오히려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근로 복지시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지어진 곳이 전국에 4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아동 관련 시설 345곳,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 193곳도 석면을 사용했습니다.

10곳 중 4곳 정도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셈입니다.

석면은 호흡기 질환과 폐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석면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부산, 서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교 76%의 교실 천장에 석면이 들어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석면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아동·장애인·노인시설 10곳 중 1곳 '석면 검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습니다.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어린이집도 사용 · · · 지역별 석면 건물 분포 보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426명이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노유자 시설 3천547곳 중 2천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 37%가 석면을 함유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345곳, 노인복지 시설 193곳 등 순이었습니다.

## 아동·장애인·노인시설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10곳 중 4곳

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잇따라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m<sup>2</sup>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426명이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됨에도 올 상반기에만 58억원이 부정수급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천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천600만원(2만7천303명)에서 2012년 112억7천200만원(2만949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천100만원(2만1천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7천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8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도 신고 포상금은 1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 58억 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이 올 상반기에만 5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실업 급여 수령 자격이 없는 사람 만 806명이 실업급여 58억 7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여 원에서 2012년 112억 7천여만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17억 7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또 실업급여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2011년 2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 3억 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올 상반기에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600만원(2만7303명)에서 2012년 112억7200만원(2만949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100만원(2만1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70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도 신고 포상금은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남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900만원

【밀양=뉴스시스】 안지울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됨에도 올 상반기에만 58억원이 부정수급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와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부정수급과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1만 806명이 58억 7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갔다.

경남지역은 올 상반기 655명에 4억 90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 5000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1년 219억 5600만원(2만 7303명)에서 2012년 112억 7200만 원(2만 949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117억 7100만원(2만 1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경남지역은 2011년 1492명에 11억 5900만원에서 2012년 1042명 5억 5300만원, 2013년 4명에 7억 3200만원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 23명에 4억 9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 70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이다.

경남은 2011년 1억 9248만원에서 2012년 2억 5065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2013년 2억 4611만원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 2억 5252만원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 신고 포상금은 1억 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자스민 의원 " 상반기 실업급여 58억원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부정수급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1만800명이 58억7천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징수액 등 64억 5천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천600만원에서 2012년 112억7천2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17억7천1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2011년 2억7천만원, 2012년 2억8천만원, 2013년 3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만도 1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14년 09월 30일 화요일 002면 종합

##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 범죄라고 인지해야”

지난해 3160건 발생  
전체학대 30% 차지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지난해에만 3160건이 발생, 전체 아동학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서학대·성학대·방임 등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 피해자가 폭행과 체벌을 교육의 일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증상

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건수는 3160건(30.9%)으로, 3843건(37.6%)이 발생한 정서학대 다음으로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발한 것도 질곡 및 울산에서 발생한 신체학대 사건이었다.

특히 신체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행위 자체가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사랑'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신체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가운데 반항·거짓말·도벽 등의 '적응·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42.4%, 주의산만·과잉행동·계집증독 등의 '정서·정신건

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32.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자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폭행을 훈육의 일종이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잦다.

또 신체학대는 아동의 증상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학대로 숨진 총 9명의 아동 가운데 5명이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등 중복 학대로, 1명은 신체학대만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소유욕과 체벌을 허용하는 한국의 그릇된 문화가 만나 발생하는 최악의 학대가 바로 신체학대"라며 "신체학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체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 아동·노인시설 40% 석면 검출

### 도내 145곳중 54곳...사회적 약자 건강 위협 지적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져, 노약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노유자 시설 145곳의 40.7%인 54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석면 건축물이 가장 많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28곳)이며, 뒤이어 아동복지시설(26곳), 기타 노유자시설(5곳) 등이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에 대한 석면 함유 조사를 끝냈다. 이 중 961곳(36.9%)이 석면 건축물로 확인됐다. 도내의 경우 조사대상 198곳 중 145곳에서 관련 조사

가 끝났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970년대 이후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인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국기자 psy2351@

##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추진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서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겨우 2곳 만이 장애인 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게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 며 "관련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그동안 민간기업 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한성·윤명희·홍철호·박윤옥·유승민·조명철·이예리사·이완영·김태흠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법안 발의”

민간 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 및 인식 개선 교육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이자스민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겨우 2곳 만이 장애인 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간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법안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한성, 윤명희, 홍철호, 박윤옥, 유승민, 조명철, 이에리사, 이완영, 김태흠 의원이 함께했다.

## 이자스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민간기업들이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결과를 점검해 공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간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한성, 윤명희, 홍철호, 박윤옥, 유승민, 조명철, 이예리사, 이완영, 김태흠 의원이 함께했다.

##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 포장' 3년 간 577건"

국내 제과 업체들의 과대 포장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5백 7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과 업체들이 포장 규정을 어긴 사례는 모두 5백 77건이었고,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1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포장 횡수나 포장 공간 비율에 대한 규정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 방지를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국내 제과업체들이 과대 포장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5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 위반 건수는 577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경우는 포장 횡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또 수입 과자의 경우, 질소에 의한 과대포장 위반 사례 6건이 올해 처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과자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국내 제과업체들이 과대 포장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5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과류 과대포장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위반 건수는 577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6천만원에 달했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경우는 2011년 159건(과태료 3억7천551만원), 2012년 227건(과태료 5억2천188만원), 2013년 191건(과태료 5억6천410만원) 등으로 포장 횟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다.

또 수입된 외국 과자제품의 경우에도 질소에 의한 과대포장 위반 사례 6건이 올해 처음 적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과자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2014년 10월 04일 토요일  
009면 사회

### 비진학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업종별 근로실태

업종	시간당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적 있다	시간 외 임금을 못 받았지만 그냥 참고 일했다
24시간 편의점	4668원	41.6%	31.2%	57.1%
빵집	4687원	45.2%	28.6%	50.0%
패스트푸드점	4757원	77.3%	18.2%	37.5%
커피전문점	4987원	45.9%	24.3%	37.5%

자료: 고용노동부

##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패스트푸드·빵집·커피숍 4곳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41% 최저

세종=윤지희 기자

집 나간 아버지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는 A양(19)은 대학에 가는 대신 돈을 번다. A양은 시급 5210원, 즉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공고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A양은 근무 첫날 “시급은 3800원이고 원래 편의점들은 시급 제대로 쳐주는 곳이 없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유명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들에는 편의점 알바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넘친다. 약속한 것보다 더 일하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고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비진학청

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4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이 가장 나쁜 알바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만 14~23세의 고교·대학 비진학 청소년 가운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빵집,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4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근무시간은 49.5%가 오후 6시~밤 12시였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4750원으로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점은 가장 낮은 4668원, 빵집은 4687원, 패스트푸드점은 4757원이었고 커피전문점만이 4987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겼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편의점 비율이 41.6%로 4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비율(31.2%)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27.3%)이 가장 높았다.

## "도산 사업장 93%,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은 2665곳이었는데, 이 중 약 93%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기업도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산 사업장은 △2011년 2541곳 △2012년 2514곳 △2013년 2665곳이었다. 올해 도산한 사업장은 1584곳(7월 기준)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347곳 △2012년 2337곳 △2013년 2484곳으로 전체의 92.3~93.2%를 차지했다. 올해는 1476곳이 도산해 전체의 93.2%를 점유했다.

한편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572곳(21.4%) △건설업 387곳(14.5%) △도·소매업 260곳(9.7%)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805곳(30.2%) △경기도 721곳(27.0%) △경상남도 180곳(6.7%)순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 이자스민 의원 " 지난해 도산사업장 93%가 50인 미만 "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도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 2천665곳 중 9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21.4%, 건설업 14.5%, 도소매업 9.7% 순이었고, 시도별로는 서울시 30.2%, 경기도 27%, 경상남도 6.7% 등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도산한 사업장은 1천584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 전망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등 경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런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도산기업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난해 도산한 2665개 업체 중 93%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로 조사돼 영세사업장들이 영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도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산한 사업장은 지난 2011년 2541개 업체, 2012년 2514개 업체, 2013년 2665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1584개 업체가 지난 7월까지 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347개 업체, 2012년 2337개 업체, 2013년 2484개 업체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7월까지의 1476개 업체로 전체의 93.2%를 점유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572개 업체(21.4%), 건설 387개 업체(14.5%), 도·소매 260개 업체(9.7%)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805개 업체(30.2%), 경기 721개 업체(27.0%), 경상남도 180개 업체(6.7%)순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2014년 10월 06일 월요일  
008면 경제

## 4년간 폐업사업장 92%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서비스·건설업 가장 많아

최근 4년 사이 도산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기업도산 현황 자료를 보면 도산한 사업장은 2011년 2541곳에서 2012년

2514곳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에 2665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도산한 사업장은 1584곳으로 현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347곳, 2012년 2337곳, 2013년 2484곳으로 전체의 92.3~93.2%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이자스민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기질 우려 수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실내놀이터 62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유해물질별 기준 초과율은 폼알데하이드(HCHO)가 37.3%(110개 지점 중 40개 지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산화탄소 26.2%(122개 지점 중 32개 지점), 미세먼지(PM10) 12.1%(107개 지점 중 13개 지점) 등의 순이었다.

유해화학물질로 심하면 신경계 장애와 암까지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기준 초과율도 9.3%(107개 지점 중 10개 지점)에 달했다.

현재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한 종류만 기준치를 넘어도 공기 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수 실내놀이터에서 무려 4종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아울러 124개의 측정지점 중 9개의 지점에서는 흡연(담배연기)의 지표물질로 알려진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실내놀이터는 정부의 실내공기질 의무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내놀이터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실내놀이터 공기 중 오염물질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내 놀이터 62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HCHO) 기준치 초과 비율은 37.3%, 이산화탄소 26.2%, 미세먼지(PM10) 12.1% 등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기준 초과율도 9.3%에 달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유지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5종이다. 이 중 한 종류만 기준치를 넘어도 공기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다수의 실내놀이터에서 무려 4종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것이다.

124개의 측정지점 중 9개의 지점에서는 흡연(담배연기)의 지표물질로 알려진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실내놀이터는 정부의 실내공기질 의무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실내놀이터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정부가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두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는 빠져 있는데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곳이 다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내놀이터 62 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유해물질별 기준 초과율은 폼알데하이드(HCHO)가 37.3%(110개 지점 중 40개 지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산화탄소 26.2%(122개 지점 중 32개 지점), 미세먼지(PM10) 12.1%(107개 지점 중 13개 지점) 등의 순이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심하면 신경계 장애와 암까지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이 물질의 기준 초과율도 9.3%(107개 지점 중 10개 지점)에 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국내제품 1.2배 증가에 그쳐

최근 4년간 국내 생수 판매량이 1.2배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해외생수 판매량은 5.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284만6000t을 기록한 생수 판매량이 2013년에는 347만4000t으로 1.22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입판매업체의 생수 판매량이 국내 생수에 비해 많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 2010년 1만

2000t에 그친 판매량이 2013년에는 6만9000t으로 5.75배 증가했다.

이 처럼 국내외 생수 판매량이 모두 늘고 있지만, 먹는 물 제조업체내 품질 관리인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도 품질 관리인이 될 수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 이자스민, 한국 생물다양성 '빨간불'

생물다양성총회 개최를 통해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래 동식물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사진)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유입 외래생물의 수가 894종에서 2167종으로 약 40% 증가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동·식물 중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것은 18종이며, 이중 2009년 이후 지정된 종이 9종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다. 생태 교란종 가운데 9종은 이미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을 보면 조사할 때마다 10%이상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고 있다. 1998년에 194종, 2005년 221종, 2012년 246종으로 늘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생태교란종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외래생물들의 서식범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데 체계적인 퇴치사업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공조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관리 소홀로 최근 급증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27명의 근로자가 7천 백만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2012년에는 52명이 1억4천만 원,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 2년 사이 약 17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2011년 이후 단 4차례만 지급됐습니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년새 체당금 부정수급 17배↑...신고포상 고작 4차례  
이자스민 의원 "유명무실한 신고포상제 정비해야"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관리 소홀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부터 도입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2년 사이 약 17배 증가했다.

2011년 27명의 근로자가 7천1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2012년에는 52명이 1억4천만원,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원을 부정하게 받아 2년 사이 약 17배가 늘었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2011년 이후 단 4차례만 지급됐다.

연도별로 신고 포상금은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3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체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원인 사업주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났다.

2012년에는 사업장 39만곳이 160억원, 2013년에는 43만곳이 210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7월 현재 체납 사업장은 50만곳이며 체납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임금체불자 지원' 체당금 부정수급, 2년새 17배 급증

국회 환노위 이자스민의원

지난해 12억원.. 2011년 1.4억 대비 17배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당금 부정수급 규모는 12억원(311명)으로 2011년 1억4000만원(52명)에 비해 17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2011년이후 단 4차례만 지급됐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잡월드·한국고용정보원 4곳 3% 밀돌아

고용률 70% 달성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마저 청년고용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기준을 밀도는 곳도 33%나 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개 공공기관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웃돈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16.4%) 단 한곳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잡월드는 청년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한국고용정보원(0.9%), 한국폴리텍(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1.0%) 등도 청년고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외 근로복지공단(5.4%), 한국산업인력공단(4.5%), 한국장애인고용공단(3.0%), 노사발전재단(3.2%) 등 대부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5%를 밀돌았다.

특히 12개 공공기관중 한국잡월드를 포함한 4곳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율(매년 정원의 3%이상 선발)을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준비가 미흡하고, 할당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고용노동부가 모범적으로 청년고용 채용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률 '낙제' 수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률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이 대부분 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정원이 1748명에 달하지만 청년채용은 지난해 18명, 404명 정원의 한국기술교육대학은 4명에 그쳐 각각 청년 채용률이 1%에 그쳤고, 정원 217명의 한국고용정보원은 0.9%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상회한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 단 한 곳 뿐이었고, 한국잡월드의 경우 청년 채용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부 산하기관조차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며 "고용부가가 모범적으로 청년 고용 채용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자스민 “지난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만2천여 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과 구제 결정 건수가 해마다 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신청 건수는 2011년 만 800여건에서 2012년 만 1400여 건, 2013년 만 2800여 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8천여 건이나 접수돼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결정도 2011년 1019건에서 지난해에는 120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 2천여 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과 인용 건수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는 전년도 이월건수 합산으로 2011년 만 848건에서 2012년 만 천444건, 2013년 만 2천 805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벌써 8천166건이나 접수돼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 또한 2011년 1천19건, 2012년 1천106건, 2013년 1천20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 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 원으로 늘어 2년 새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5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천여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및 인용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전년도 이월 건수 합산)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천444건, 2013년 1만2천80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벌써 8천166건이나 접수돼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 또한 2011년 1천19건, 2012년 1천106건, 2013년 1천2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원으로 늘어 2년 새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51억원을 넘어섰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당해고 얼마나 많길래...구제신청 해마다 늘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구제를 신청하는 일이 해마다 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전년도 이월 건수 합산)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444건, 2013년 1만2,80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8,166건이 접수돼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결정한 횟수 역시 2011년 1,019건, 2012년 1,106건, 2013년 1,2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원으로 늘어 2년 새 3배 가까이 뛰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2014년 10월 08일 수요일 019면 정책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실효성 높여야

**중소기업 참여율 0.005%  
“인증 기준 세분화 필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만을 따져 두 갈래로 나눠 인증을 시행하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형성하는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에 응모할 때 가점을 주거나,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용자를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자료를 8일 발표했다. 국내 대기업 2916곳 중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4.94%(144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 낮은 0.005%(335만1404곳 중 183곳)였다. 지방 참여 비율도 낮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공공기관이 0곳, 울산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0곳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인증기준을 개정했지만, 배점과 항목이 좀 달라졌을 뿐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규모별로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인증을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소리다. 이 의원은 기업의 조직 구성 등을 감안해 인증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인증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 이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기업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해 이미 두 차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인증기준을 개정했다”며 “업종별로 인증기준을 나누는 문제의 경우 유관연구기관 등과 논의한 끝에 아직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5개를 샘플링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실행 관련 점수를 분석한 결과, 현행 인증기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전예현 기자 aykim@naeil.com

## 세계일보

2014년 10월 08일 수요일 011면 사회

### 술 파는 키즈카페... 안전·위생 ‘사각지대’

규정 없고 관리주체 불명확  
일부 놀이터선 니코틴 검출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실내 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 카페’가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

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정감사 자료에서 “키즈카페는 법률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라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키즈카페는 보통 식품접객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데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 판매 식품 위생관리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실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는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공기질에 대한 규제도 미흡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내 놀이터 62곳(124개 측정지점) 중 8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

이 의원은 “일부 실내 놀이터에서는 흡연의 지표물질인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정부의 관리와 금연구역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정부가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두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는 빠져 있는데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곳이 다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내놀이터 62 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유해물질별 기준 초과율은 폼알데하이드(HCHO)가 37.3%(110개 지점 중 40개 지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산화탄소 26.2%(122개 지점 중 32개 지점), 미세먼지(PM10) 12.1%(107개 지점 중 13개 지점) 등의 순이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심하면 신경계 장애와 암까지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이 물질의 기준 초과율도 9.3%(107개 지점 중 10개 지점)에 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 全北日報

2014년 10월 09일 목요일  
006면 사회

###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내 최근 4년간 '월 32건'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가 최근 4년간 월평균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1372건이다.

이 기간 내려진 구제명령은 구제신청의 11.8%(16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151건으로 나타났다. 최명국기자

## 총청투데이

2014년 10월 09일 목요일  
009면 경제

### 임금체불 근로자지원금 ‘줄줄’ 2년새 부정수급 17배 늘어나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관리 소홀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부터 도입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2년 사이 약 17배 증가했다. 2011년 27명의 근로자가 7천1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2012년에는 52명이 1억4천만원,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원을 부정하게 받아 2년 사이 약 17배가 늘었다. 연도별로 신고 포상금은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3건 지급됐다. 연합뉴스

## 기상청, 3년간 100억 성과급 평평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최근 3년간 10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고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등 소속기관이 받은 성과급은 올해 36억 8천여만 원, 지난해 36억 3천여만 원, 2012년 30억 5천여만원 등 총 107억 254만원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직개편과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상청·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이자스민 의원 국감서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10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았다.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음주운전·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경고·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들은 2011년 8명,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7월 현재까지 1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등 소속기관이 받은 성과급은 2014년 36억 8천여만원, 2013년 36억 3천여만원, 2012년 30억 5천여만원 등 총 107억 254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상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상청 · 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10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았다.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음주운전·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경고·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들은 2011년 8명,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7월 현재까지 1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등 소속기관이 받은 성과급은 2014년 36억8000여만원, 2013년 36억3000여만원, 2012년 30억5000여만원 등 총 107억254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상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자스민 "기상청 해킹시도 3년 새 20배 증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49건에 불과했던 해킹시도가 2013년 966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며 "기상청이 디도스 등 각종 해킹공격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 해킹을 시도한 경우가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47건), 중국(438건), 네덜란드(312건), 인도(1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킹공격 시도를 유형별로 보면 올해는 디도스 21건, 웹 해킹 353건, 비인가 접근 197건, 바이러스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0년 사이버보안센터를 발족해 24시간 보안 관제 업무를 하고 있지만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등 보안시스템이 뚫리는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보안센터의 보안 관제 업무를 외부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보보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010면 사회

## 기상청 3년간 107억 성과급 잔치

기관평가선 최하등급 불구하고  
연구용역 유관기관 몰아주기도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와 성과급 잔치, 날씨예보 오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과 소속기관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3년간 100억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퇴직 임원 다수가 재취업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기상청이 발주한 교육용역을 전부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는 전직 기상청장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장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기상청장 등 기상청 출신 퇴직자 8명이 재취업한 이 재단법인인은 2011년 이후 기상청이 발주한 교육용역 사업 93건(약 50억원)을 100% 수주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이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라고 기상청에 요구했고, 기상청은 지난 2일 교

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기상청은 지정 취소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달 17일 1억610만원의 ‘외국인 기상예보관 초청연수 운영사업’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감사원의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107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상특보 8714건 중 2779건(31.9%)이 틀렸다고 밝혔다. 특히 해일 관련 특보의 경우 전체 17건 중 4건만 맞았던 것으로 나타나 정확도가 23.5%에 그쳤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도 기상청의 ‘기상청 예보 정확도 강수유무’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된 기상청의 비 예보 실패율이 평균 39.5%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월 현재 지진 관측장비 총 127곳 중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장비가 절반에 가까운 53곳에 이른다고 지진예보 기초장비의 노후문제를 제기했다.

##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위반율 2012년 31.3%, 2013년 31.2%, 올해 상반기 32.9%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천402곳 중 1천378곳(31.3%)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다. 2013년에는 3천48곳 중 952곳(31.2%)이, 2014년 상반기에는 1천728곳 중 569곳(32.9%)이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6.8%, 올해 상반기 4.4%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천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45만 134명으로 늘었다.

##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해마다 30%를 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천402곳 중 31.3%인 천378곳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고, 지난해에는 31.2%, 올해 상반기에는 32.9%가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올해 상반기 19.8%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10곳 중 3곳 외국인 고용법 위반

### 외국인 채용사업장 점검 결과

### 작년 3048곳 중 952곳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402곳 중 1378곳(31.3%)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다. 작년에는 3048곳 중 952곳(31.2%)이, 올해 상반기에는 1728곳 중 569곳(32.9%)이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6.8%, 올해 상반기 4.4%였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45만134명으로 늘었다.

허연희 기자/okidoki@heraldcorp.com

## 이자스민 "3년간 수질오염사고 369건 발생...3년간 2배 증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가 3년 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4일 환경부 소속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수질오염 사고는 2012년 82건, 2013년 15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130건으로 전년 대비 85%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건 이상의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장소별로 보면 2012~2013년을 기준으로 원주청, 대구청, 한강청, 금강청, 낙동강청, 새만금청 순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증가했으며, 영산강청은 유일하게 사고가 감소했다. 올 7월까지를 더하면 한강청의 수질오염사고가 2012년 15건에서 올해 60건으로 4배 증가해 타지역을 압도했다.

아울러 3년간 발생한 사고내역을 보면 전체 36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56건(42%)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형 사고였다. 61건(17%)은 원인미상으로 보고됐는데 대부분이 어류폐사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수질오염사고 내용의 42%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형 사고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백 수천마리가 죽은 어류폐사 사고의 대부분이 '원인미상'으로 보고되고 있어 당국의 조사능력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4대강 사업 준설선, 낙동강 56척 방치돼 '시한폭탄'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4척이 침몰된 채 방치돼 있으며, 52척은 언제 침몰될지 모른 채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내 준설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에는 모두 56척의 준설선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낙동강 상류·중류에 26척이, 하류에는 30척의 준설선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설선이란 강·운하·항만·항로의 깊이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한 준설 작업, 물 밑의 흙·모래·광물 등을 채취하는 배로, 수중구조물 축조의 기초공사, 해저 폐기물을 끌어올려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폐업신청을 한 준설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하여 육지로 반출하고 있으나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준설선은 반출을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선주들은 인양비가 1척당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들어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침몰선 선박주를 고발을 했으나 무혐의로 결정이 나기도 해 청은 우선 침몰선을 인양하고 배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할 준설선 26척 중 21척을 올해 안까지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관할 준설선 30척 중 8척이 올해 안까지 인양한다는 예정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낙동강에는 침몰선을 포함해 27척의 준설선이 아직 인양계획도 없이 버려진 상태다.

특히 지난 9월 낙동강에 침몰된 4척의 준설선 중 2척에서 기름 탱크가 발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방치 되어 있는 준설선은 기름이나 녹 등으로 만약 표류하거나 침몰될 시에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사고가 일어나 영남지역의 취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루 빨리 배를 인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감]구제역 매몰지가 위험하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구제역 매몰지 평균 점검 횟수가 갈수록 감소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10월14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구제역 매몰지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소별 평균 점검횟수는 5번이지만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균 1회로 평균 점검횟수가 가장 적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점검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관리 미흡이 412건, 배수로 미흡이 69건, 침출수 유출 의심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에서 2011년 묻은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서 돼지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된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2013년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제역 매몰지 점검실태를 살펴보면 1건의 조치사항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는 게 이자스민 의원의 입장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1년 조성된 매몰지의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점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침출수가 유출됐을 경우 주위환경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 매몰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 건설현장 임금체불 4만1,250명 피해

건설업 현장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한 건설업 종사자 수는 4만1,250명으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건설업 체불 종사자 수가 6만5,01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임금체불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건설업 체불 규모는 2,452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60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조사된 체불 규모는 1,762억원이다.

산업재해도 건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재해자 수는 1만1,0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402곳 중 1378곳(31.3%), 2013년에는 3048곳 중 952곳(31.2%), 2014년 상반기에는 1728곳 중 569곳(32.9%)이 각각 외국인 고용법을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江原日報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008면 경제

## 올 건설현장 임금체불 4만1,250명 피해

건설업 현장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한 건설업 종사자 수는 4만1,250명으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건설업 체불 종사자 수가 6만5,01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임금체불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

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건설업 체불 규모는 2,452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605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조사된 체불 규모는 1,762억원이다.

산업재해도 건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재해자 수는 1만1,0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하위윤기자

**문화일보**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011면 사회

## 장애인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2년새 위반 과태료 부과 4.3배

### 시민 신고건수도 5.9배로

■ 해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늘어 지난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만2191건이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2만8026건, 2013년 5만2940건으로 2년사이 4.3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에 의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신고 건수도 지난 2011년 1만3178건에서 2012년 3만9727건, 2013년 7만8193건으로 나타나 2년 전보다 5.9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지난 2011년 11억2646만 원에서 2012년 25억5192만 원, 2013년 47억2825만 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안전행정부가 도입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국민들의 신고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신호등 고장 신고 등 다양한 민원 신고를 받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3년 1만6976건을 기록하며 32.1%를 차지해 최다 위반 지자체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은 2011년 4195건으로 전체의 34.4%를 기록하며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3년 1만4820건으로 28%를 기록했고, 울산, 대구, 충북, 대전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신고로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기자 bigpaper@

## 세계일보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011면 사회

### 외국인 고용업체 30% 고용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 피해"

지난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은 소음과 진동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71건을 접수해 2843건을 재정과 조정, 중재 합의 등으로 처리했다. 391건은 자진 철회로 종결됐고, 14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처리된 2843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2455건(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일조 129건(5%), 기타 50건(2%) 순이었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3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농작물 피해 179건(6%), 건축물 피해 84건(3%), 수산물 피해 54건(2%), 기타 440(15%) 등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662건(23%), 경기 654건(23%) 등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5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웃 간의 소통의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감]환경분쟁 86% 소음·진동 때문...2건중 1건 수도권에서

환경분쟁 10건중 8건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2건중 1건은 서울 등 수도권이 차지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처리된 2843건중 86%(2455건)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였다. 대기오염 191건(6%), 일조 129건(5%), 수질오염 59건(2%), 기타 50건(2%) 순이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11%), 농작물 피해 6%, 건축물 피해 3% 순이다.

지역별로는 2843건중 서울 23%(662건), 경기 23%(654건), 경남 8%(215건) 순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54%(1531건)을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웃 간의 소통의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자스민, 대형마트 25%만 '녹색매장' 운영

범국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녹색매장' 제도가 일부 유통기업만 참여해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매장 지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매장 506개 중 25%인 128개 매장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매장 128개 점포 중 롯데마트가 72개, 이마트가 32개, 홈플러스가 3개 참여 유통기업 간 녹색 매장 지정점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살펴보면 녹색매장은 임의 지정제로 기업의 참여 의지가 없으면 꼭 지정을 받지 않아도 돼 의지가 있는 유통기업만 참여해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대형마트는 등장과 함께 급속한 성장으로 소비자와 제조사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매장 지정을 통해 유통사의 환경경영과 산업계의 환경경영 유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녹색제품 판매장소 의무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녹색매장 지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의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마을상수도(지하수)에서 검출된 자연방사성 물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지난 3년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라돈·우라늄·전알파(우라늄, 라듐, 라돈 등 모든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alpha$ -방사선) 등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3곳, 진안·정읍·고창·김제·남원 2곳, 임실·완주 1곳 순이었다. 특히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5곳이었으며, 1곳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 모두가 검출됐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마을상수도 7곳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무주군 무주읍 산의마을, 적상면 상비마을, 진안 동향면 새울·상전면 중기마을, 정읍 산외면 만병마을, 순창 유등면 유촌마을, 임실 오수면 둔기마을 등의 마을상수도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무주 산의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가 모두 검출됐으며, 이 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이 4642pCi/L, 우라늄이 227 $\mu$ g/L, 전알파가 44.48pCi/L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적용한 기준으로 볼 때 우라늄은 미국 기준치(우리나라 동일)의 7.6배, 전알파는 미국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 특히 전알파 수치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라돈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병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전국 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을상수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조사대상 1380개소 중 150곳(11%)에서 라돈, 26곳(2%)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34곳(2.5%)에서는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국립공원 대피소의 취사장과 화장실 등에 피뢰설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장산지구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 때 탐방객들에게 위험을 알릴 예·경보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공원 대피소 및 부대시설 피뢰설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8개 대피소 중 대피소 1곳과 취사장 1곳, 화장실 5곳에 피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피소 중 피뢰설비가 되지 않은 곳은 지리산남부의 피아골이며, 취사장은 세석 대피소다. 또 화장실은 장터목·세석·로타리·연하천·피아골 등이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은 벼락 발생 때 주변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대피소에 피뢰설비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탐방객 안전을 위해 피뢰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장산 지구에는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공원 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4개 국립공원 중 내장산지구에는 경보시설이 없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이후 재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2018년까지 노후 된 장비에 대해 80%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12곳의 국립공원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외출자제 권고 무색

황사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실외보다 실내가 최대 2배 높게 나왔다. 건물 내부 공기가 인체에 더 위해하다는 이야기다.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다.

문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내리면서 외출 자제 권고령이 떨어지지만, 정작 실내 공기 질이 실외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 초미세먼지(PM2.5) 농도

(단위:  $\mu\text{g}/\text{m}^3$ , 24시간 기준, 측정: 3~5월)

\*현재 실내기준은 없으며 실외기준은 WHO  $25\mu\text{g}/\text{m}^3$ , 한국  $50\mu\text{g}/\text{m}^3$  이하

시설 종류	실외 평균	실내 평균	실내 최대
<b>서울</b>			
어린이집(12곳)	43	53	97
지하철(12곳)	42	61	117
지하상가(6곳)	38	39	47
<b>대구</b>			
어린이집(8곳)	58	42	79
지하철(8곳)	48	57	77
지하상가(8곳)	37	39	50

자료: 환경부

15일 환경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황사철인 올 3~5월 다중시설 54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서울 지하상가를 제외한 모든 측정 장소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2배까지 높게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대구가톨릭대 양원호 교수(산업보건학)팀은 서울의 어린이집 12곳, 지하상가 6곳, 지하철역 12곳과 대구의 같은 시설 각 8곳을 측정했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PM10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초미세먼지(PM2.5)도 대구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높았다.

현재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외 즉 대기기준을 만들어 실내 공간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외기준 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 1월부터 PM2.5의 대기기준이  $50\mu\text{g}/\text{m}^3$ 로 신설돼 적용된다. WHO의 대기기준은 이보다 2배 강한  $25\mu\text{g}/\text{m}^3$ 다.

이번 측정값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할 우리나라 대기기준에 대해 실외에서는 거의 만족시킨 반면 실내에서는 오히려 절반 이상의 측정군이 이를 넘겼다. 서울의 어린이집 12곳의 PM2.5 실내 평균 농도는  $53\mu\text{g}/\text{m}^3$ 로 WHO 기준의 배를 넘었다. 약 4배인  $97\mu\text{g}/\text{m}^3$ 을 기록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측정 시 수집된 미세먼지에서는 크롬과 아연,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중금속 등 총 금속 함유량 역시 대부분의 측정군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PM2.5에 함유된 금속 양은 서울 어린이집은 실내가 실외의 2배, 서울의 지하철은 7배 많았다. 지하철은 전동차의 휠과 레일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속입자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 교수는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음식을 만들거나 사람의 부산한 움직임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와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합쳐져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환기만 강조하거나 집에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환기시설을 의무화해서 실내 발생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미세먼지 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미세먼지' 실내가 더 오염...환경기준 '무방비'



초미세먼지 농도 (µg/m³)		
	실 내	실 외
지하역사	52.1	59.8
실내주차장	32.8	27.8
터미널	32.5	66.3
보육시설	31.4	23.8

자료: 환경부



▲ MBC 방송 캡처

◀ 앵커 ▶

지하철역이나 주차장의 초미세먼지,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지하철역.

대기질 측정기가 매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서해정/한국환경공단 ▶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인데, 현재는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미세먼지만 쟀 것으로 이보다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 이선숙 ▶

"(공기가) 탁하다고 그럴까,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해요."

황사철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지하철역이나 주차장 등은 오히려 실내가 실외보다 공기질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자주 오가는 지하철 역이나 버스 터미널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보다 최대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초미세먼지의 실내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중국에서 오는 황사 등 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건물 안의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 홍윤철/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질환, 그 외에도 뇌졸중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정화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내에도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01면 종합

##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 다중시설 54곳 조사... 외출자제 권고 무색

어린이집 기준치 최고 4배 초과  
서울지하철 금속양 7배 충격  
실내 기준 마련 등 대책 시급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황사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니 실외보다 실내가 최대 2배 높게 나왔다. 건물 내부 공기가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 이야기다.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다.

문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내리면서 외출 자제 권고령이 떨어지지만, 정작 실내 공기 질이 실외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5일 환경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의 원에게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황사철인 올 3~5월 다중시설 54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해 결과 서울 지하철을 제외한 모든 측정 장소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2배까지 높게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대구가톨릭대 양원호 교수(산업보건학)팀은 서울의 어린이집 12곳, 지하철 6곳, 지하철역 12곳과 대구의 같은 시설 각 8곳을 측정했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PM10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초미세먼지(PM2.5)도 대구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높았다.

현재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외 즉 대기기준을 만들어 실내 공간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외기준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 1월부터 PM2.5의 대기기준이 50 $\mu\text{g}/\text{m}^3$ 로 신설돼 적용된다. WHO의 대기기준은 이보다 2배 강한 25 $\mu\text{g}/\text{m}^3$ 다.

이번 측정값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할 우리나라 대기기준에 대해 실외에서는 거의 만족시킨 반면 실내에서는 오히려 절반 이상의 측정군이 이를 넘

초미세먼지(PM2.5) 농도  
(단위:  $\mu\text{g}/\text{m}^3$ , 24시간 기준, 측정: 3~5월)  
\*현재 실내기준은 없으며 실외기준은 WHO 25 $\mu\text{g}/\text{m}^3$ , 한국 50 $\mu\text{g}/\text{m}^3$  이하

시설 종류	실외 평균	실내 평균	실내 최대
<b>서울</b>			
어린이집(12곳)	43	53	97
지하철(12곳)	42	61	117
지하상가(6곳)	38	39	47
<b>대구</b>			
어린이집(8곳)	58	42	79
지하철(8곳)	48	57	77
지하상가(8곳)	37	39	50

자료: 환경부

겼다. 서울의 어린이집 12곳의 PM2.5 실내 평균 농도는 53 $\mu\text{g}/\text{m}^3$ 로 WHO 기준의 배를 넘었다. 약 4배인 97 $\mu\text{g}/\text{m}^3$ 을 기록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측정 시 수집된 미세먼지에서는 크롬과 아연,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중금속 등 총 금속 함유량 역시 대부분의 측정군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PM2.5에 함유된 금속 양은 서울 어린이집은 실내가 실외의 2배, 서울의 지하철은 7배 많았다. 지하철은 전동차의 휠과 레일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속입자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 교수는 "실내의 중금속 농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음식을 만들거나 사람의 부산한 움직임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와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합쳐져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환기만 강조하거나 집에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환기시설을 의무화해서 실내 발생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미세먼지 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내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 최근 3년간 라돈·우라늄·전알파 등 기준치 초과 무주6곳 가장 많아...1곳은 3개 물질 동시 검출도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마을상수도(지하수)에서 검출된 자연방사성 물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지난 3년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립 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3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라돈·우라늄·전알파(우라늄, 라듐, 라돈 등 모든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alpha$ -방사선) 등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3곳, 진안·정읍·고창·김제·남원 2곳, 임실·완주 1곳 순이었다. 특히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5곳이었으며, 1곳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 모두가 검출됐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마을상수도 7곳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무주군 무주읍 산의마을, 적상면 상비마을, 진안 동향면 새울·상전면 중기마을, 정읍 산외면 만병마을, 순창 유등면 유촌마을, 임실 오수면 둔기마을 등의 마을상수도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무주 산의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가 모두 검출됐으며, 이 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이 4642pCi/L, 우라늄이 227 $\mu$ g/L, 전알파가 44.48pCi/L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적용한 기준으로 볼 때 우라늄은 미국 기준치(우리나라 동일)의 7.6배, 전알파는 미국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 특히 전알파 수치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라돈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 하고 있다"면서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전국 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을상수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조사대상 1380개소 중 150곳(11%)에서 라돈, 26곳(2%)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34곳(2.5%)에서는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엽기자 colorgogum@

## 도내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 지리산, 대피소·취사장·화장실 파괴설치 미흡 내장산은 기상이변 발생 때 예·경보시설도 없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국립공원 대피소의 취사장과 화장실 등에 파괴설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장산지구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 때 탐방객들에게 위험을 알릴 예·경보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

공원 대피소 및 부대시설 파괴설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8개 대피소 중 대피소 1곳과 취사장 1곳, 화장실 5곳에 파괴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피소 중 파괴설비가 되지 않은 곳은 지리산남부의 피아골이며, 취사장은 세석 대피소다. 또 화장실은 장터목·세석·로타리·연하천·피아골 등이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은 벼락 발생 때 주변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대피소에 파괴설비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탐방객 안전을 위해 파괴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장산 지구에는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공원 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4개 국립공원 중 내장산지구에는 경보시설이 없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지구온난화 등 기

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이후 재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2018년까지 노후된 장비에 대해 80%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12곳의 국립공원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영민기자 youngmin@

## " 사회적기업 컨설팅 100억 투여, 효과 무색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해마다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단위 : 백만원, 개소, %)

연도	경영컨설팅 비용	영업이익		영업손실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1	1,228	89	14.1	542	85.9
2012	2,830	124	16.7	620	83.3
2013	3,078	해당연도 사회적 기업 평가분석은 다음해 하반기에 완료			
2014	2,584				
합계	9,721				

[자료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및 경영컨설팅 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97억 2천만원을 지출한 반면, 사회적기업 80%이상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경영컨설팅 비용은 2011년 12억2천800만원, 2012년 28억3천만원, 2013년 30억7천800만원, 2014년 25억8천4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쓰였다. 반면 영업손실을 입은 사회적기업은 2011년 542개소에서 2012년 620개소로 늘었다.

이 의원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컨설팅 지원이 영업이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고용률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국내 30대 민간기업 대다수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율 기준 (2.5%)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대신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상황이어서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개 기업 중 29개 업체는 연중 의무고용율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5개 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충족시켰다.

고용율 준수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이었다

반면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LG와 SK도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무 고용율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며 "의무 이행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관행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의존이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 원인”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 부정 사건과 관련해 그 원인이 일부 개인의 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사이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한국폴리텍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6.7%로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감독자의 소속을 분석한 결과, 폴리텍대학 소속이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진의 소속 분포를 보면 ‘PM(Product Manager)’의 경우 전체 267명중 68.9%에 해당하는 184명이 폴리텍 소속이었고 ‘교육훈련전문가1’에 해당하는 개발진 276명중 폴리텍 소속은 152명으로 55.1%를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폴리텍대학에 많은 사업을 위임하는 현상이 결국 이번 기능장 시험 비리까지 만들어낸 원인”이라며 “과도한 의존은 공단 사업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폴리텍도 수업 이외의 각종 사업에 과도하게 참여하게 되면 본연의 교육 훈련이 부실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천400억 써

산재미가입 사업장 21만곳 중 10인 이하가 96% 차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천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천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천곳, 2012년 7만8천곳, 2013년 2만2천곳, 올해 1~7월 2만2천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천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 공단이 사후에 알게 된 경우만 공식 통계에 잡히므로 실제 미가입 사업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4년간 보험금 2천여억 원 지급



### ▲ MBC 방송 캡처

[정오뉴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지급된 산재 보험금이 4년간 2천4백억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약 2천4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21만 곳에 이르지만,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업체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시험 비리' 수사중 합격자 발표 강행... '공단 꼼수' 질타



[앵커]

JTBC는 국가 최고 기술인을 뽑는 기능장 시험의 부정 비리를 연속 고발해 왔습니다. 오늘(21일) 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격자 발표를 강행한 인력공단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기자]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기능장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합격자 발표를 강행한 공단의 처리 방식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 합격자 발표를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장관님께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기능장 합격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공단 측은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는 법령을 따랐다는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단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기능장 시험의 명예를 깎아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범 이사장/한국산업인력공단 : 그 점은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합격자 가운데 부정행위 연루자는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신문**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019면 정책

##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산재보상 4년간 2400억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 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000곳, 2012년 7만8000곳, 2013년 2만2000곳, 올해 1~7월 2만2000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000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문화일보**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010면 사회

##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재해 보험료 근로복지공, 4년간 지출 2300억 육박

###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해야

■ 가입이 의무화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지난 4년 동안 지출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가 2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

지공단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지급한 재해 보험료는 2011년 832억 원, 2012년 761억 원, 2013년 637억 원, 2014년(7월 기준) 1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2011년 3만8162곳, 2012년 7만7836곳, 2013년 2만1997곳인 것

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만1586곳이나 됐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황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이 사후에 알게 된 경우만을 집계한 자료라는 점에서 실제 미가입 사업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6%에 달해 영세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이 깨닫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문화일보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011면 사회

# 쓰레기 봉투값 지역별 '제각각' 부산 기장-전남 곡성 4.7배차

<10L 430원>      <10L 90원>

## 부산에 이어 광주·대전順

■ 전국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지역에 따라 4~5배가량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광역시·도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10L짜리를 기준으로 부산이 412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북과 경북이 154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L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원 이상인 지역은 부산 외에 광주(380원), 대전(330원), 울산(288원), 인천(289원), 경기(245원), 경남(227원) 등이었고, 200원 이하는 서울(187원), 제주(180원), 충남(176원), 세종(170원), 충북(161원), 전남(156원) 등이었다.

특히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전국 구·군 단위로 좁혀서 살펴보면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모든 구가 43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전남 곡성군과 전북 고흥군이 90원으로 가장 낮아 4.7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경북 봉화군과 경북 영양군도 각각 120원과 100원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배에 가까운 종량제 봉투 가격 차이는 서민 생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만약 부산 중구와 전남 곡성군의 가정집에서 한 달에 10장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다면 각각 4300원, 900원으로 한 달에 3400원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1년치로 계산한다면 각각 5만 1600원, 1만 800원이 돼 부산의 가정은 종량제 봉투 값으로만 4만 800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

내일신문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019면 정책

##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원 5곳중 4곳 안전에 문제

### “여가부, 관리강화해야”

제주도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5곳 중 4곳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5개 중 4개의 수련원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받았다.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 시설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사후 철저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강조했다.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내년 4월에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안전 전담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 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 '빛공해로부터 건강 지키기' 雨中캠페인(연합뉴스 자료사진)

2000~2013년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Light Pollution)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빛 공해는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지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 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8천 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1천30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엔 1천97건, 2012~2013년엔 6천 326건으로 치솟았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 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서울이 3천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천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 순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 “빛 공해 싫어요”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

[헤럴드경제=하남현·배두현 기자]“빛이 싫어요, 24시간 내내 너무 밝으면 정말 싫어요”

보통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만, 24시간 내내 밝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른바 빛 공해(Light Pollution)다. 빛 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광고물, 시골 가로등 등이 빛 공해 주범이다.

빛 공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낮과 밤을 혼동시키면서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 공해 경계음은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8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5년새 빛 공해가 목격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늘다가 2010년 13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1년(1097건), 2012~2013년(6326건)에는 경총 뛰었다.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서울이 3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주목되는 것은 빛 공해로 인한 민원 이유다. 민원인들은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자원순환연대(이사장 김재욱)가 경희대학교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에 의뢰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중구 시청역 부근·마포구 신촌역 부근·서초구 강남역 부근·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인공조명 193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84개(44%)가 빛 공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 상가가 밀집한 신촌전철역 일대는 조사한 14개 광고물 중 10개(71.4%)가 기준치를 초과,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빛공해’ 남의 일 아니다

“빛이 싫어요. 24시간 내내 너무 밝으면 정말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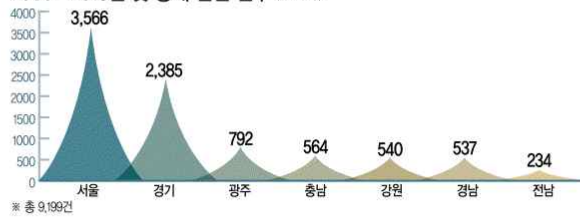
보통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만, 24시간 내내 밝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른바 빛 공해(Light Pollution)다. 빛 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광고물, 시골 가로등 등이 빛 공해 주범이다.

빛 공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낮과 밤을 혼동시키면서 농식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 공해 경계음은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8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5년새 빛 공해가 목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건수 (단위:건)



### 광고물 등 지나친 인공조명

### 낮과 밤 혼동 생태계 교란

### 수면장애·암 발병률 높여

### 5년새 민원사례 급증



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늘다가 2010년 13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1년(1097건), 2012~2013년(6326건)에는 경종 뛰었다.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서울이 3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주목되는 것은 빛 공해로 인한 민원 이유다. 민원인들은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증감 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자원순환연대(이사장 김재욱)가 경희대학교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에 의뢰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중구 시청역 부근·마포구 신촌역 부근·서초구 강남역 부근·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인공조명 193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84개(44%)가 빛 공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 상가가 밀집한 신촌전철역 일대는 조사한 14개 광고물 중 10개(71.4%)가 기준치를 초과,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남현·배두현 기자/airinsa@

## “쓰레기봉투 값 가장 비싼곳 '부산'...지역별 최대 4.7배 차이”

지방자치단체별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대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리터(L)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강서구·기장군 제외)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모든 구의 10L 쓰레기봉투 가격은 430원이었다.

부산 다음 쓰레기봉투 평균 가격이 높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380원), 대전광역시(330원), 인천광역시(289원), 울산광역시(288원), 경기도(245원), 경상남도(227원), 대구광역시(220원), 서울특별시(187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 곡성군과 고흥군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9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자스민 의원은 "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같은 양의 쓰레기라도 지자체별로 처리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주요 원인이다.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용역과정이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쓰레기봉투 지자체별 가격차 최고 6배, 가장 비싼 곳은?

전국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 영도구로 L당 46.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곡성군에서는 L당 7.8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가 6배에 이른다.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광역 지자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L당 평균 가격을 파악한 결과, 부산이 40.2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36.6원), 대전(33원), 경기(29.8원), 인천(28.6원), 울산(28.3원), 전남(26원), 제주(24.5원), 경남(22.6원), 충남(21.2원), 대구(21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0L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은 대부분 지역에서 400원 이상에 판매되며 서울의 평균 가격은 187원으로 부산의 반값에도 못 미쳤다. 전남의 경우 10L 평균가격은 156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용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은 L당 13.9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15원), 강원(16.4원), 세종(17.6원) 등의 봉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L 가격으로 보면 전남 곡성·고흥은 90원, 전북 진안과 경북 영양은 100원에 그쳤다.

이자스민 의원은 “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이처럼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쓰레기 처리 용역 과정을 점검해 가격 인하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비싼 땅값과 환경 부담 때문에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서울은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그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는데 앞으로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과 용역 대행 방식에 따른 봉투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자체 고유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014면 사회

## 쓰레기 봉투 가격 지역별 최대 6배 차

부산 영도구 10ℓ 당 46.3원·전남 곡성군 7.8원

전국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 영도구로 10ℓ 당 46.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곡성군에서는 10ℓ 당 7.8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가 6배에 이른다.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의원(새누리당)은 광역자치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10ℓ 당 평균 가격을 파악한 결과, 부산이 40.2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36.6원), 대전(33원), 경기(29.8원), 인천(28.6원), 울산(28.3원), 전남(26원), 제주(24.5원), 경남(22.6원), 충남(21.2원), 대구(21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0ℓ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은 대부분 지역에서 400원 이상에 판매되며 서울은 187원으로 부산의 반값도 되지 않았다. 전남은 10ℓ 평균가격이 156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

였다. 10ℓ 당 가격은 충북이 13.9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15원), 강원(16.4원), 세종(17.6원) 등의 봉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ℓ 가격으로 보면 전남 곡성·고흥은 90원, 전북 진안과 경북 영양은 100원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쓰레기 처리 용역 과정을 점검해 가격 인하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비싼 땅값과 환경 부담 때문에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서울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그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는데 앞으로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철웅 기자 hero@kyunghyang.com

## '의무가입' 아닌 외국인근로자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590억 납부

이자스민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홍보 강화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5년간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은 근로자수는 16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방법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35만2560명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590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100명 중 96명이 60세 미만이고, 체류기간도 짧아 최근 5년 동안 보험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16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외국인근로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9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사업주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가능성이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건강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제도에 대해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시 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럭까지 동원... ‘쓰레기 불법처리’ 2년새 4배

3년간 전국 불법 투기·처리 쓰레기 (단위: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현황	6434	1만7632	2만6556
공공장소 투기 쓰레기수거량	4만6221	4만8253	4만9462

무단 소각·매립 등 ‘기승’ 연평균 1만t씩 늘어난 셈

매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으로 소각·매각되는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천안 서북구청은 천안시 서북구 공단 내 길거리에서 스티로폼 등 폐기물을 1t 트럭에 가득 실어와 버리는 고물상 운영자 조모(53) 씨를 적발했다. 조 씨는 스티로폼 등이 돈이 되지 않자 이날 늦은 오후 해가 지길 기다렸다 길거리에 스티로폼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많아져 환경파괴는 물론 처리 등으로 각종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사·도별 쓰레기 불법처리(무단소각·매립 등)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불법처리된 쓰레기는 2011년 6434t에서 2012년 1만7632t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2만6556t으로 증가해 2년 사이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경기도가 1만9084t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758t, 충북이 119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과 공원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장소에 투기된 쓰레기수거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만6221t, 2012년 4만8253t에서 2013년 4만9462t으로 증가해 2년 새 약 3000t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충남이 1만1892t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140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 등이 많은 부산과 강원도 각각 5339t, 4605t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으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012면 사회

# 트럭까지 동원... '쓰레기 불법처리' 2년새 4배

무단 소각·매립 등 '기승'  
 연평균 1만t씩 늘어난 셈  
 경기도가 1만9084t로 최고

**3년간 전국 불법 투기·처리 쓰레기** (단위: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폐기물 불법처리	6434	1만7632	2만6556
적발 현황			
공공장소 투기	4만6221	4만8253	4만9462
쓰레기수거량			

매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으로 소각·매각되는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천안 서북구청은 천안 시 서북구 공단 내 길거리에서 스티

로폼 등 폐기물을 1t 트럭에 가득 싣어 버리는 고물상 운영자 조도(53) 씨를 적발했다. 조 씨는 스티로폼 등이 돈이 되지 않자 이날 늦은 오후 해가 지길 기다렸다 길거리에 스티로폼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많아져 환경과 폐는 물론 처리 등으로 각종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쓰레기 불법처리(무단소각·매립 등)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불법처리된 쓰레기는 2011년 6434t에서 2012년 1만7632t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2만6556t으로 증가해 2년 사이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경기도가 1만9084t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758t, 충북이 119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과 공원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장소에 투기된 쓰레기수거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만6221t, 2012년 4만8253t에서 2013년 4만9462t으로 증가해 2년 새

약 3000t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충남이 1만1892t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140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 등이 많은 부산과 강원도 각각 5339t, 4605t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으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기자 bigpaper@munhwa.com